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학위논문

영토분쟁 당사국의
분쟁해결 수단 선택 요인 분석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최 한 솔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영토분쟁의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분쟁당사국 양국 간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요인으로 국력의 차이, 경제적 상호의존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분쟁해결 수단을 두루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때문에 선택 편향(selection bias)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이 합리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분쟁해결 수단들 간의 관계를 네 단계의 게임트리와 같은 구조로 이해하고, 선택 과정을 양국의 관계에 따라 추적하고자 했다.

국제정치학의 세력우위이론, 동맹이론, 경제의존, 그리고 민주평화론 등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를 빌려와 연구를 설계하였다. 핵심독립변수로 분쟁당사국 간의 군사력 지출의 차이, 동맹관계의 유무,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친밀도를 구체화하여 이에 따른 가설을 세우고, 네 단계의 분쟁해결 수단 선택 과정을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정량적 검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대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영토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지 여부는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도가 클 수록 분쟁당사국은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반대로 상호의존의 정도가 작은 국가 간에는 무력사용이나 평화적 분쟁해결수단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양국 간에 과거 무력갈등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세력우위 상황에서는

분쟁 해결시도를 하지 않고, 반대로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세력균형 상황에서는 분쟁 해결시도를 한다.

또한 분쟁해결 수단을 무력사용과 평화적수단 중에서 선택할 때에는 국방비 지출의 차이, 동맹관계,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두 국가 간에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세력우위 상황이고, 동맹관계가 없으며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크면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한다. 반대로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은 세력균형 상황이며 동맹관계가 있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작을 경우 무력사용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을 선택할 때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선택할 때에는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친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큰 경우에는 양자협상을 선호하며, 반대로 상호의존도가 낮은 경우에는 제3자 개입을 선택한다. 또한 양국 간에 무력갈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친밀도가 높은 경우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 개입에 있어서 구속성 여부를 선택할 때에는 국방비 지출의 차이와 동맹관계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쟁당사국 간의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세력우위 상황이며 동맹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호한다. 반면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은 세력균형 상황이며 동맹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선택에 있어서 분쟁 당사국 간의 국력 차이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선택 문제가 국제정치학의 주요 연구영역인 세력균형 및 세력우위, 경제적 상호의존론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영토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양자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데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영토분쟁, 분쟁해결수단, 국방비 지출의 차이, 동맹, 경제적 상호의존, 민주평화론

학번: 2011-23190

차 례

차 례	iv
그림 차례	v
표 차례	v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질문	4
3. 연구의 함의	6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8
1.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영토분쟁 해결 연구	8
1) 국력	8
2) 동맹이론	13
2.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영토분쟁 해결 연구	16
1) 경제적 상호의존	16
2) 민주평화론	20
3.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영토분쟁의 해결 연구	24
4. 가설 설정	27
1) 분쟁당사국 간의 국방비 지출 차이	27
2) 분쟁당사국 간의 동맹관계	32
3) 분쟁당사국 간의 경제의존	36
4) 분쟁당사국 간의 정치체제적 친밀도	40
5. 소결	42
III 연구설계	45
1. 연구 대상	45

1) 분석대상	45
(1) 영토분쟁	45
(2)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46
2) 분석 시기	50
2. 데이터 및 변수 설정	51
1) 분석단위와 데이터	51
2) 종속변수	52
3) 핵심 독립변수	55
(1) 분쟁당사국의 국력 차이	57
(2) 동맹관계	59
(3) 분쟁당사국 간의 경제의존	61
(4) 분쟁당사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적 친밀도	63
4) 통제변수	65
(1) 공통의 동맹 포트폴리오	66
(2) 무력 갈등의 유무	66
(3) 분쟁해결 수단 사용 경험	67
(4) 지리적 근접성	67
IV 실증분석 결과	69
1. 분석 모형	69
1) 영토분쟁의 분쟁해결 시도 여부에 대한 선택	70
2) 무력사용과 평화적 해결수단에 대한 선택	72
3) 분쟁해결 중 제3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선택	75
4) 제3자 개입의 구속성 여부에 대한 선택	77
2. 분석 결과 및 함의	79
V 결론	83
1. 논의	83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가능성	85
참고 문헌	87

그림 차례

I.1	국제분쟁 해결수단의 종류	2
I.2	영토분쟁의 종결	3
III.1	첫번째 단계	53
III.2	두번째 단계	54
III.3	세번째 단계	55
III.4	네번째 단계	56

표 차례

III.1	종속변수의 값과 분포	57
III.2	국방비 지출의 차이와 영토분쟁 해결 시도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표 .	58
III.3	국방비 지출의 차이와 무력사용/평화적 수단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59
III.4	국방비 지출의 차이와 양자협상/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59
III.5	국방비 지출의 차이와 비구속적/구속적 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 차분석표	59
III.6	동맹관계와 영토분쟁 해결 시도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표	60
III.7	동맹관계와 무력사용/평화적 수단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61

III.8 동맹관계와 양자협상/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61
III.9 동맹관계와 비구속적/구속적 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 .	61
III.10경제적 상호의존과 영토분쟁 해결시도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표 . . .	62
III.11경제적 상호의존과 무력사용/평화적 수단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	62
III.12경제적 상호의존과 양자협상/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 .	63
III.13경제적 상호의존과 비구속적/구속적 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 석표	63
III.14민주주의 정치체제 친밀도와 영토분쟁 해결 시도 여부에 대한 교차분 석표	64
III.15민주주의 정치체제 친밀도와 무력사용/평화적 수단 선택에 대한 교 차분석표	65
III.16민주주의 정치체제 친밀도와 양자협상/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 분석표	65
III.17민주주의 정치체제 친밀도와 비구속적/구속적 제3자 개입 선택에 대 한 교차분석표	65
IV.1 영토분쟁 분쟁해결 시도 여부에 대한 로짓 분석	71
IV.2 무력사용과 평화적 해결수단에 대한 로짓 분석	73
IV.3 분쟁해결 중 제3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선택 로짓 분석	76
IV.4 제3자 개입의 구속성 여부에 대한 로짓 분석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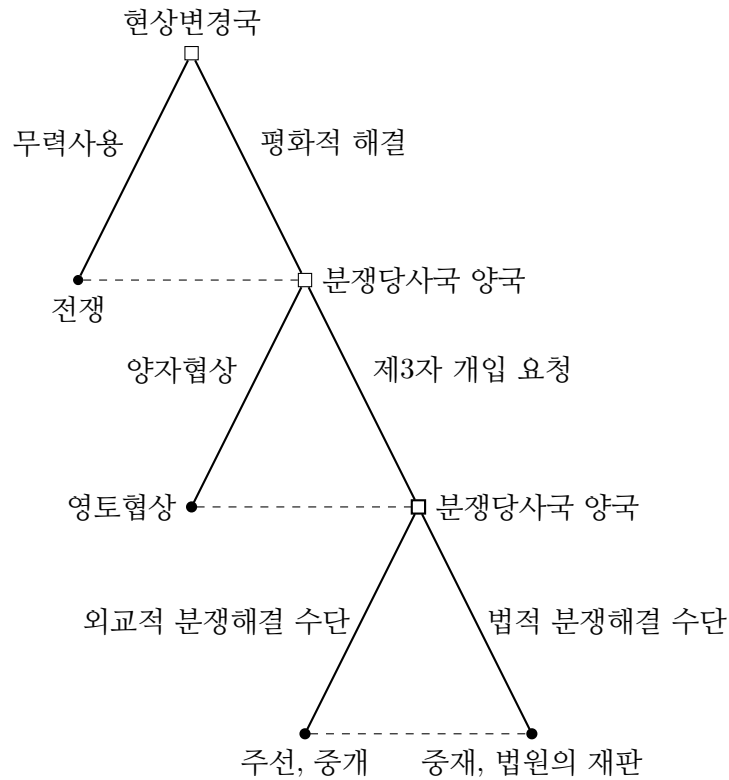
I 서론

1. 문제 제기

영토분쟁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전방위에 걸쳐서 분쟁당사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을 야기한다. 영토분쟁 자체가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비율도 다른 종류의 분쟁에 비하여 비교적 낮다. 영토분쟁은 그만큼 국가에게 중요한 이슈이다. 때문에 분쟁당사국은 영토분쟁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한다. 그러므로 분쟁당사국은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합리적인 고려 아래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전통적인 수단은 무력사용, 곧 전쟁이었다. 그러나 양차대전을 통해 대규모 전쟁의 참담함을 목격한 이후, 국제사회는 전쟁을 불법화하고 또한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단(peaceful settlement)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갖추어진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은 크게 분쟁당사국 간의 양자협상(bilateral negotiation)과 제3자 개입(third-party activ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제3자의 개입은 다시 비구속적 제3자 개입(non-binding third-party activity)과 구속적 제3자 개입(binding third-party activity)으로 나뉜다. 전자는 흔히 외교적 분쟁해결 수단이라고도 분류된다. 분쟁해결 결과에 분쟁당사국에 대한

그림 I.1: 국제분쟁 해결수단의 종류



구속력이 없고 단지 권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외교적 분쟁해결 수단은 주선 (Good Office)¹⁾, 중개(mediation), 심사(inquiry), 조정(conciliation), 다자협상 (multilateral negotiation) 등이 속한다. 후자는 법적 분쟁해결 수단이라고도 분류된다. 한번 분쟁해결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이는 국제법에 의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해결 수단은 중재재판(arbitration), 국제법원의 재판(adjudication)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분쟁해결수단은 각기 장단점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영토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상황과 분쟁 상대국의 상황, 그리고 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¹⁾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는 본 논문의 제III장 제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때 여러 분쟁해결 수단 중 유난히 선호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가장 성공율이 높은 분쟁해결수단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림 I.2는 1919년부터 2001년까지의 영토분쟁 중에서 종결된 영토분쟁이 어떤 분쟁 해결수단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해결수단을 통한 영토분쟁의 종결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²⁾ 그림 I.2에서 볼 수 있듯이 영토분쟁의 분쟁해결 수단은 각각 시도되는 횟수의 편차가 크게 분포한다. 또한 실제로 그 수단을 사용하여 분쟁이 종결된 정도가 시도되는 빈도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2: 영토분쟁의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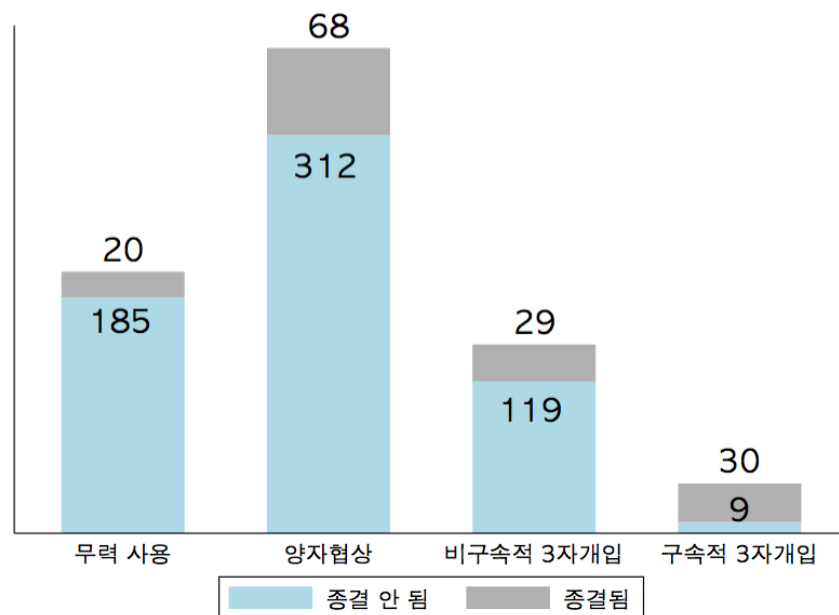


그림 I.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장 선호되는 분쟁해결 방식은 총 772회의 분쟁해결 시도 중 380회를 차지하고 있는 양자협상이며, 두번째가 무력사용으로

²⁾ Hensel (2012)의 pp.19를 참조.

모두 205회 시도되었다. 비구속적 제3자 개입, 즉 외교적 해결수단은 148회 시도되었으며, 구속적 제3자 개입, 즉 법적 해결수단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시도 횟수인 39회를 기록하였다. 반면 분쟁해결 시도가 분쟁의 종결로 이어지는 비율은 구속적 제3자 개입이 76.9%로 가장 높다. 두번째로 높은 종결율을 보이는 분쟁 해결수단이 비구속적 제3자 개입으로 19.6%이며, 양자협상은 그와 비슷한 17.9%, 그리고 무력사용은 9.8%로 매우 낮은 종결율을 기록한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주 시도되는 분쟁해결수단을 그만큼 많이 선호받는 수단이라고 본다면, 선호되는 수단이 정작 성공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불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높은 분쟁 종결율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원은 낮은 인기를 면하지 못한다.³⁾ 반면 분쟁 종결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자협상은 가장 선호되는 분쟁해결 수단이다. 왜 선호와 성공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일까? 성공율이 선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국가가 영토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고려하고 선택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

2. 연구 질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영토분쟁은 그 어느 분쟁보다 국내, 국외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³⁾ 높은 성공율은 순수하게 국제법원이 영토분쟁의 해결에 탁월한 수단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해결할 수 있는 영토분쟁만이 국제법원을 찾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의문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던 질문이다. 국제법원과 같이 분쟁 당사국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하여 중재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식의 분쟁해결 방법은 이에 참여하기로 당사국이 동의했다는 것부터가 분쟁에의 해결 의지가 있었던 ‘상대적으로 쉬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해결 성공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사례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Simmons (1998)를 참고. 그러나 선택 편향의 문제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높은 성공률의 뒷편에 있는 낮은 선호도를 설명하기 힘들다.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속적 제3자 개입의 76.9%라는 분쟁 해결 성공율은 분명 놀라운 수치이다. 하지만 그 성과를 단순히 큰 숫자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수치 이면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높은 성공율 만큼이나 두드러지게 낮은 시도율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국가로 하여금 영토분쟁의 해결수단을 선택하게 하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분쟁당사국이 분쟁 해결수단을 선택하는 원인을 추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분쟁당사국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선택이 순차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선택을 결정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므로 ICJ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인 무력사용, 양자협상,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이들 수단을 시도하는 영토분쟁을 각기 비교한다.

이때 분쟁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분쟁당사국의 관계에게 주목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분쟁당사국 국가쌍이 갖는 양자적 특징을 고려한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분쟁해결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설을 세워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무엇이 영토분쟁의 해결수단을 선택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토분쟁이 어떤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 어떤 조건에서 국가가 분쟁을 해결을 시도하고 시도하지 않는지, (2) 무력사용과 평화적 분쟁해결수단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지, (3) 양자협상, 그리고 제3자 개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지, (4) 비구속적 제3자 개입, 그리고 구속적 제3자 개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복수의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주로 정량적 분석, 또는 다수의 사례에 대한 통계분석을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중심분석대상인 개별 국가가

국익의 측면에서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하므로, 합리적 선택이론이 연구의 핵심적인 논리가 된다.

3.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분쟁당사국이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연구질문을 네 단계에 걸쳐 구체화하였다. 즉, 구속적 제3자 개입(법적 분쟁해결 수단)을 통하여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사례 안에서의 선택 편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구속적 제3자 개입(외교적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사례를 함께 다룬다.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고려한다면 이 단계는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네번째 단계가 된다. 또한 제3자 개입을 선택하는 사례 안에서의 선택 편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개입을 선택하는 사례와 양자협상을 선택하는 사례를 함께 다루어, 분쟁당사국이 양자협상과 제3자 개입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를 구성한다. 이 단계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면 세번째 단계가 된다. 또한 양자협상과 제3자 개입은 모두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이며, 이를 통틀어 다룰 때에는 무력사용을 선택한 사례를 함께 다룬다. 그러므로 무력사용과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가 되며, 이는 두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력사용과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은 모두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와 함께 비교한다. 이 단계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당사국이 맞닥뜨리는 가장 첫번째 단계가 된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하여 영토분쟁 해결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피하지 못했던 선택 편향을 방지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위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는 영토분쟁에서 분쟁당사국의 양자관계와 분쟁해결 수단의 선택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의 검증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

에서 영토분쟁해결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당사국의 양자관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양자관계와 분쟁해결수단 선택 간의 회귀분석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분쟁당사국 간의 관계에 따라 어떤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속개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영토분쟁의 해결은 무력사용, 양자협상, 제3자 개입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느냐는 철저하게 국가의 손익계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어떤 조건에서 어느 수단을 선호하게 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본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는 전략적 선택의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권력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자유주의, 관념에 초점을 맞추는 구성주의는 각각 영토분쟁을 다르게 해석하므로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택하는 분쟁해결수단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바라본다. 본 장에서는 분쟁해결 수단에 대한 연구를 이론적 시각에 따라 분류하고 검토한다.

1.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영토분쟁 해결 연구

1) 국력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보다는 국력, 즉 물질적 능력(material capability)을 중시한다. 무정부성이 전제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국력에 기반한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목적은 파워, 즉 권력이다. 국력은 권력이 되며, 이는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권력과

안보는 정치적인 모든 행위의 중심적인 동기이기 때문이다.¹⁾

부에노 데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가 게임이론을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정책 선택에 적용한 이래로²⁾ 국가를 합리적인 행위자로 상정하고 국가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하리라는 전제하에 국가의 정책 결정을 분석하는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을 적용한 연구가 한 분파를 이루었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국제분쟁에서 기대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하여 게임이론과 결합한 인과적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에노 데 메스키타 등이 수립한 게임트리에 비추어 영토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상황이 발생하고 전개된다. 문제상황의 전개와 함께 당사국은 상대국가가 자국에 비해 얼마나 강하거나 약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영토분쟁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나 국경 등에 대하여 영유권이 중복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1) 먼저 국가A는 현상유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변경을 요구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2) 현상변경을 요구받은 국가B는 상대국A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수용한다면 분쟁은 이대로 종결될 것이다. (3) 그러나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 국가B는 양자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고,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동시에 상대국인 국가A가 마찬가지로 협상과 무력사용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양국이 어떤 분쟁해결수단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그 결과, 양국이 모두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나, 둘 중의 어느 한 국가라도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

¹⁾ Robert Gilpin, "The Richness of Realist Tradition", *Neorealism and Its Critics*, Robert Keohane e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305

²⁾ Bruce Bueno de Mesquita, "An Expected Utility Theory of International conflict", *The American Political Review*, Vol. 74, No. 4 (Dec., 1980), pp.923-927; "Risk, Power Distributions, and the Likelihood of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25, No.4 (Dec. 1981), pp.542-544

정한다면 무력갈등, 즉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³⁾ 분쟁의 해결수단 선택에 있어서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 국가A와 국가B가 하는 선택인 (2), (3), 그리고 (4)의 단계이다.

이때 국가가 어느 경우에서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비용과 이익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분쟁을 일으켜 그 분쟁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p 라고 하면, 반대로 불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은 $1-p$ 이다. 또한 분쟁의 비용을 C 라고 하고, 분쟁에서 자국이 승리할 경우 발생하는 효용을 W , 분쟁에서 패배할 경우 발생하는 효용을 L 이라고 하자. L 은 음수값일 것이므로, $p*W + (1-p)*L$ 가 C 보다 커야 국가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승리를 가능케 하는 특정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반대로 $p*W + (1-p)*L$ 가 C 보다 작으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게 된다.⁴⁾ 여기에서 현실주의 이론은 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력을 주목한다. 국력이 강하다면 전쟁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⁵⁾ 그러므로 강대국은 약소국에 비해 분쟁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한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할 때 평화적인 수단보다 무력사용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상대국보다 국력이 더 강할 수록 무력사용을 통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더 발전시키면 두 국가 간의 국력 차이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국력차이가 큰 국가 간에는 상대적인 강대국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므로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또한 분쟁해결 수단에 대해서도 무력사용을 통하여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반대로 국력 차이가 작은 국가 간에는 그 어느 국가도 자국이 상대적으

3) Bruce Bueno de Mesquita, James D. Morrow, and Ethan R. Zorick, "Capabilities, Perception, and Escal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1 (Mar 1997), pp.17

4) Bruce Bueno de Mesquita, 1981, pp.544

5) Geoffrey Blainey, *The Cause of War*, 1988[1973]

로 강대국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분쟁해결을 주저할 수 밖에 없으며,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무력사용보다는 평화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현실주의이론에서 국가 간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 전쟁을 감소시킨다는 주장과 맞닿아있다. 또는 신현실주의 분파 중, 강대국이 적극적으로 패권을 수호하고자 한다고 보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길 확률이 높을 때, 그래서 이익을 취할 기회가 있을 때 국가는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를 영토분쟁에 대입하면, 국력 차이가 많이 날 수록 분쟁해결 수단 중에서 무력사용을 더 선호할 것이다. 반대로 국력 차이가 작을수록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전제 하에 반대의 논리를 전개하는 현실주의 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신현실주의 중에서도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로 지칭되는 이 들이며,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으로 불린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현상 변경을 원하는 국가가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국가보다 국력이 약할 때는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즉 양국 간의 국력 차이가 클 때에는 무력갈등이 억지 된다. 그러나 현상변경 국가는 마침내 국력이 강해졌을 때 비로소 그를 실행에 옮긴다. 그러므로 기존의 강대국의 국력이 약해지거나 또는 현상변경 국가의 국력이 강해져서 양국 간의 국력 차이가 작아질 경우 무력갈등, 즉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⁶⁾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선택에 있어서는 억지이론이 더 많은 선행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억지이론을 영토분쟁에 대입하면, 국력 차이가 작을 경우에는 오히려 무력사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추정할

⁶⁾ A.F.K. Organski, *World Politics*, Knopf, 1958.; A.F.K. Organski and Jacek Kulger, *The War Led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Suzanne Werner, "Choosing Demands Strategically the distribution of power,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the risk of conflict",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6, (Dec. 1999), pp.719-723

수 있다. 반대로 국력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쌍의 영토분쟁은 무력사용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 즉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이 애초에 무력사용에 비적극적이므로, 강대국의 입장에서조차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게 된다. 전쟁에 드는 비용보다는 평화적인 수단에 드는 비용이 더 작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강대국은 승리할 확률, 또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⁷⁾

영토분쟁에서 억지이론을 입증하면서 선행연구에서는 국력의 차이를 여러 지표로 측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력은 첫번째로 군사력으로 측정된다. 허스, 겔피, 그리고 베넷(Paul Huth, Christopher Gelpi, and D. Scott Bennett)의 연구에서는 군사력과 특히 2차 핵방어 능력을 통한 세력균형이 갈등을 증가시킨다는 억지이론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렸다.⁸⁾ 둘째, 국력을 국방비 지출로 측정하는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월터(Barbara F. Walter)의 연구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기준으로 독립을 꾀하는 국가 내의 영토분쟁을 살펴보았다. 그는 흥미롭게도 국방비 지출이 큰 국가일수록 독립을 요구하는 분쟁에서 강경한 태도보다는 협상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월터는 이를 두고 국방비 지출이란 강대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소국임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정하였다.⁹⁾ 하지만 그보다는 정부와 독립세력을 국내정치가 아닌 국제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고려하면 다른 결론을 얻을 수

⁷⁾ Arie Kacowicz, *Peaceful Territorial Chang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4; Robert Mandel, "Roots of the Modern Interstate Border Disput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4, No.3, (1980), pp.450; Arie Kacowicz, "The Problem of Peaceful Territorial Chang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8, No.2 (1994), pp.223-225

⁸⁾ Paul Huth, Christopher Gelpi, and D. Scott Bennett, "The Escalation of Great Power Militarized Disputes: Testing Rational Deterrence Theory and Structural Rea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7, No.3 (1993) pp.613-614

⁹⁾ Barbara F. Walter, "The Critical Barrier to Civil War Settl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1, No. 3, (1997) pp.349-356

있다. 즉, 국방비 지출이 크다는 것은 정부가 독립세력보다 막강한 힘의 차이를 소유하고 있음을 뜻하며, 허스 외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두 분쟁당사자 간의 힘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평화적인 분쟁해결 확률이 더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⁰⁾ 또한 국력을 강대국과 약소국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강대국의 영토분쟁에 주목한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기블러(Douglas M. Gibling)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대국과 강대국의 영토분쟁은 무력사용이 더 잦다. 그는 두 강대국으로 이루어진 라이벌 국가쌍은 영토분쟁이 발생시 분쟁의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국가쌍, 즉 강대국-비강대국 국가쌍이나 비강대국-비강대국 국가쌍의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주장했다.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강대국-강대국 국가쌍이 경험하는 분쟁은 2배 더 많으며, 영토분쟁 자체의 기간도 4배 더 길다.¹¹⁾ 여기에서도 세력균형 상태의 두 국가 간에는 국제분쟁 발생 시 무력사용을 선택하게 되며, 이는 곧 분쟁의 해결에도 장애물이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력을 측정하여 실시한 선행연구가 국력의 차이가 작을 때 무력사용이 더 많이 사용되고 반대로 국력의 차이가 클 때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선호되리라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맹이론

앞서 살펴본 국력 차이에 대한 연구는 그러나 국력을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국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은 요소는 군사력과 경제력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없다. 가장 많이 쓰이는 국력 지표인 국가능력종합지표(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 CINC)마저도 강철생산량이나 도시거주 인구의 비례로 일

¹⁰⁾ Huth et al. (1993), pp.616-617

¹¹⁾ Douglas M. Gibling, "Control the Issue, Control the Conflict: the Effect of Alliances that Settle Territorial Issues on Interstate Rivalri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2, No. 4 (1997) pp.352-356

국의 산업화 정도를 측정한다. 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들 국력지표만으로는 상대국의 국력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이처럼 계량적인 국력지표 이외의 방법으로 국력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정치이론은 동맹관계에 대한 이론을 발달시켰다. 국제정치학의 동맹이론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월츠(Kenneth Waltz)에 따르면 국가가 국력을 강화하고자 할 때, 내적으로는 군비증강 등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동맹 체계를 통해 우방을 늘린다.¹²⁾ 동맹관계를 통해 국가는 공동의 적에 대한 집단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동맹의 규모가 큰 것이 무력사용을 더 야기할지 아니면 평화적 해결수단을 추구하게 할지의 문제는 논쟁적이지만, 애초부터 동맹의 목표는 집단안보를 통해 적국의 도발을 억지하고, 만에 하나 발생하는 제3국과의 무력갈등에서 동맹국의 개입을 통해 전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대로 동맹의 목적이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동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쟁을 확대시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¹³⁾ 그러나 동맹의 신뢰도가 클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동맹은 분명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¹⁴⁾ 동맹관계는 서로 긴밀할 수록 전시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이는 곧 평시에 그만큼 큰 동맹유지비용을 소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목표 아래에서 동맹국들은 서로 비용과 이득을 저울질하여 동맹관계를 유지한다.¹⁵⁾ 다시 말해 동맹의 목표가 어느 쪽

¹²⁾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bley, 1979, pp.185

¹³⁾ John A. Vasquez, "The Steps to War: Toward a Scientific Explanation of Correlates of War Findings", *World Politics*, Vol.40, No.1, pp.122-130

¹⁴⁾ Alastair Smith, "Alliance Formation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9, No.4 (1995) pp.409-410

¹⁵⁾ Glenn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36, No.04, 1984, pp.461-495; James D. Morrow, "Alliances, Credibility, and Peacetime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8, No. 2, 1994, pp.270-297

이든, 동맹관계에 있는 두 국가는 이 관계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지지와 협력을 추구하게 된다. 전시에 동맹국으로부터 최대한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평시에 동맹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이 늘어난다.¹⁶⁾

또한 국가는 동맹국과 우호적인 외교적,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적대적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지양하고자 한다.¹⁷⁾ 만약 동맹관계에 있는 두 국가 사이에 영토분쟁이 발생한다면, 동맹관계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서로에게 더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며 또한 훨씬 쉽게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통의 동맹관계는 국가로 하여금 공통의 안보이익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협력이 갈등보다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동맹관계와 영토분쟁 간에는 서로 반비례관계가 발생하리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간에는 영토분쟁에서 서로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추구하고, 무력사용을 통한 분쟁해결은 지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허스는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동맹국 간의 영토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확률이 비동맹국 간의 그것보다 17%가량 높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증명했다. 이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을 통해 공통의 동맹관계에 있는 두 국가는 전반적으로 영토분쟁에서 무력사용보다는 평화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¹⁸⁾ 정량적 연구 이외에도 사례연구로는 홀로웨이와 샤프(David Holloway and Jane Sharp) 등의 연구가 있다. 홀로웨이와 샤프는 바르샤바 조약의 구성국가인 동유럽 국가들 간의 영토분쟁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¹⁶⁾ Brett Ashley Leeds and Sezi Anac, "Alliance Institutionalization and Alliance Performance", *International Internationalities*, Vol.31, pp.186

¹⁷⁾ Smith, "Alliance Formation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9, No. 4, 1995, pp.405-425; James D. Fearon,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1, 1997, pp.68-90

¹⁸⁾ Paul K. Huth, *Standing Your Ground*,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pp.160-161

종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¹⁹⁾

2.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영토분쟁 해결 연구

1) 경제적 상호의존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이익에는 안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이 있으며, 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mixed interests). 또한 군사력의 사용에 대하여 부가적인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전쟁을 덜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이익이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안보 영역에서는 서로 협력할 수 없는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경제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장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핵심이었다.²⁰⁾ 특히 무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낳고, 공통의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몽테스키외에서부터 아담 스미스까지, 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은 상업의 자연적 효과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었고 칸트 역시 상업의 정신은 전쟁과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던 바 있다.

‘상업적 평화(commercial peace)’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로는 사적 행위자가 지속적인 경제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로 하여금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전통적인 시각을 들 수 있고, 두번째로는 전쟁을 분쟁해결수단으로 삼을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논리가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강화될 수록 초국가적인 결합이 심화되어 평화를 촉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분쟁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은 국가로 하여금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¹⁹⁾ David Holloway and Jane Sharp, *The Warsaw Pact: Alliance in Trans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²⁰⁾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1989)

분쟁을 무력사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전쟁으로 인하여 무역과 투자의 흐름은 방해받을 수 밖에 없다. 국가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이 아니라 전쟁이 없었을 경우 발생했을 무역과 투자로 인한 이익까지도 포기해야만 한다. 경제적 이익도 잃고 이웃국가와의 관계도 위태로워지는 기회비용을 두고 국가는 전쟁과 경제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게 된다. 무역과 투자가 주는 장기적인 수익을 고려하면, 높은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대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남는다. 이처럼 경제의존이 국가 간 무력갈등을 방지한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도 활발히 연구되어 유의미한 명제임을 증명받았다.²¹⁾ 특히 무역에서의 경제의존이 국가 간 갈등에서 반비례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일찌기 주장되었다.²²⁾

영토분쟁에 이를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경제의존이 국가로 하여금 무력사용보다는 평화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도록 종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로는 이훈과 미첼(Hoon Lee and Sarah McLaughlin Mitchell)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영토분쟁에서 무력사용을 방지한다고 주장한 것을 꼽을 수 있다.²³⁾ 또한 무역관계와 영토분쟁의 연결점을 꾸준히 추적하여, 시몬스(Beth A. Simmons)는 영토분쟁이 진행될 수록 분쟁당사국 간의 양자무역이 줄어들을 보이고, 공통의 이익(joint gai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영토분쟁으로 인한 무역 손실을 일단 한번 경험한 국가는 이후의 영토분쟁에서

²¹⁾ John R. O Neal, Frances H. O Neal, Zeev Maoz, and Bruce Russett, "The Liberal Peace: Interdependence, Democracy, and International conflict, 1950-1985",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33, No. 1, 1996, pp.11-28; John R. O Neal & Bruce Russett, "The Classical Liberals Were Right: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1950-198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2, 1997, pp.279-280

²²⁾ Solomon William Polachek, "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4, No.1, (Mar. 1980), pp.55-78

²³⁾ Hoon Lee and Sarah McLaughlin Mitchell,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erritorial Disp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6, No. 4, 2012, pp.690-691

조속하고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²⁴⁾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선택에서도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와 같은 경제적인 의존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재안에 대한 이행의 비용은 영토임에 반해, 중재를 불이행할 때의 비용은 국내, 국제적인 평판의 상실이다. 양쪽 모두 포기하기 어려운 비용이기는 하지만 후자의 상실이 특히 매우 아쉬운 국가가 있을 수 있다. 즉, 외부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경제의존이 강할수록 국가는 분쟁을 빨리 해결해야 계속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적인 평판이 중요한 국가, 즉 무역량이 늘고 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국가일수록 판결을 이행하여 분쟁을 종결하고자 할 동기가 부여된다. 특히 영토분쟁의 상대국과 활발히 무역을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를 매우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때 국가는 제3자 개입, 특히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드러난다.²⁵⁾

영토분쟁 외의 분쟁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분쟁해결 수단 선택에 대한 논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특히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졌다. 혼, 마브로디와 노드스트롬은(Henrik Horn, Petros C. Mavroidis, and Håkan Nordström)은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더 선호함을 보였다.²⁶⁾ 또한 양국의 경제의존에 따라 분쟁의 발생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²⁷⁾ FDI가 국가 간의 분

²⁴⁾ Beth A. Simmons, "Rules over Real Estate: Trade, Territorial Conflict, and International Borders as Institu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9, No.6, 2005, pp.823-848

²⁵⁾ Beth A. Simmons, "Capacity, Commitment, and Complia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002, vol. 46, no. 6, pp.838-840

²⁶⁾ Henrik Horn, Petros C. Mavroidis, and Håkan Nordström, "Is the Us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iased?", *Center of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2340, 1999

²⁷⁾ Chad Bown, "On the Economic Success of GATT/WTO Dispute Settle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6, No. 3, 2004, pp.811-823; Eric Reinhardt, *Aggressive Multilateralism: The Determinants of GATT/WTO Dis-*

쟁을 감소시키고²⁸⁾ 또한 내전도 감소시킨다는 보고 역시 매우 유의미하다.²⁹⁾

이에 반대되는 주장을 펴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 영토분쟁보다는 국제경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에 대한 것이다. 데이비스와 뢰니에(Christina L. Davis and Sophie Meunier)는 미불관계와 중일관계를 들어 두 국가가 정치적인 분쟁 중에 있을 때에도 무역관계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때의 정치적 분쟁은 미불관계의 경우 이라크전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 불일치였고, 중일관계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건이었다.³⁰⁾ 그 어느 것도 영토분쟁과는 연관이 없으나, 안보문제나 민족주의적인 문제만큼 국가에게 중요한 문제가 갖는 무게를 영토분쟁과 비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스와 뢰니에의 주장처럼 무역이 정치적 갈등과는 관계없이 계속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영토분쟁과 같이 심각한 국제분쟁의 해결에서 무력사용을 통한 분쟁해결이 발생한다고 하면 무역은 차치하고라도 통화 가치와 금융이 영향을 받게 된다.³¹⁾ 환율이 요동치면 무역도 단기적으로나마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의존론에서는 국가가 거시적인 차원의 경제적 국가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한 전쟁 역시 이외에도 국내의 사적 개인의 영향력을 고려한다. 무역과 관련된 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손해를 입으면 개인은 선

putes Initiation, 1948-1998, Emory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2000

28) Erik Gartzke and Quan Li, "War, Peace, and the Invisible Hand: Positive Political Externalities of Econom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003, Vol. 47, No. 4, 561-586

29) Katherine Barbieri and Rafael Reuveny, "Economic Globalization and Civil War", *Journal of Politics*, 2005, Vol. 67, No. 4, 1228-1247

30) Christina L. Davis & Sophie Meunier, "Business as Usual? Economic Responses to Political Tens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5, No.3, July 2011, pp.633-643

31) Gartzke, Li, and Boehmer, "Investing in the Peac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2, (Mar. 2001), pp.398-399

거 등 국내정치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의존은 영토분쟁의 분쟁해결수단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주평화론

대부분의 경제의존과 국제분쟁의 상관관계 연구는 영토분쟁을 따로 다루지 않는다. 이는 영토분쟁에서 경제의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경제의존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보통 민주주의, 국제기구 가입과 함께 세 요소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서로 경제교류가 활발해져 의존이 심화되며, 세계정부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대되면 세계평화가 가능해지리라는 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³²⁾

세 조건 중에서 민주주의국가에 대한 이론인 민주평화론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분파 중에서도 무척 독특한 이론이다. 다른 이론과는 달리,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미 사실로 증명되었으나,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이론은 좀처럼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론은 첫째,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두 명제를 모두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설명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인권을 존중하고 갈등 역시 민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화와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³³⁾ 두번째는 민주주의

³²⁾ 칸트는 소수의 귀족이나 위정자가 전쟁을 쉽게 결정하는 왕정이 아니라,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므로 전쟁을 기피할 국민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되는 공화정이 평화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비록 지금도 완전히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지는 못하였으나,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칸트가 바라던 평화가 일단은 현실화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³³⁾ John M. Owen, "How Liberalism produces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국가의 제도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일반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제도적 권력분립 때문에 전쟁 수행이 어렵고, 또한 의사결정이 공개되어 전쟁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³⁴⁾ 세번째는 민주주의와 국제기구, 경제적 상호의존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맞물려 국제 평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이들 민주평화론의 인과관계를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선택에 대입하면 각각이 설득력있는 논지를 전개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 문화와 규범이 전파된다는 첫번째 설명은 다음 절에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영토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고, 두번째와 세번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토분쟁이 발생한 후, 국가는 가장 먼저 무력사용과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 국민은 무력사용 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은 무력사용보다는 평화적 분쟁해결을 선호한다. 그들은 곧 유권자이기 때문에 선거에 의하여 정치적 생명이 유지되는 정치지도자로서는 국민의 선호와 의견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정치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기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혹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제기구를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무역과 해외투자 등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될 수록 전쟁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인 ICJ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민주평화론에 기반하여 국가가 ICJ와 같은 국제제도를 통하여 또는 국제적인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청중비용(audience costs)

Security, Vol. 19, No. 2 (Fall 1994), pp.87-125

³⁴⁾ Kenneth A. Schultz, *Democracy and Coercive Diplom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Christopher F. Gelpi and Michael Criesdorf, "Winners or Losers? Democracies in International Crisis, 1918-199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3 (September 2001), pp. 633-647

을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많다. 청중비용은 피어슨(James D. Fearson)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정치의 유권자 여론에 따라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지도자의 동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³⁵⁾ 민주평화론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연구자들은 국가가 국내 반대여론에게 인기없는 정책을 국제제도나 국제적인 합의에 의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국내적으로 쉽게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고도 주장하였다.³⁶⁾ 또는 국제적인 여론에게 자국의 의도나 정책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국제제도에 기대기도 한다.³⁷⁾ 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에 자국의 정책이 적절하다거나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의도로 국제제도를 활용한다는 주장도 있다.³⁸⁾ 그만큼 국내정치적 지지가 국제정치 정책의 수행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이기에,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수행한 양자협상의 내용을 국내정치적인 비준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 국회 내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³⁵⁾ James D. Fearson,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3, (Sep. 1994), pp.577-592

³⁶⁾ Todd L. Allee and Paul K. Huth, "Legitimizing Dispute Settlement: International Legal Rulings as Domestic Political Cov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06, Vol.100, No.2, pp.223-227; Simmons, 2002; James Raymond Vreeland, "Why Do Governments and the IMF Enter into Agreements? Statistically Selected Cas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4, No. 3, (Jul. 2003) pp.321-343

³⁷⁾ Alexander Thompson, "Coercion Through IOs: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Logic of Information Transmis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0, No. 1, (Jan. 2006), pp.1-34

³⁸⁾ Terrence L. Chapman, "International Security Institutions, Domestic Politics, and Institutional Legitimac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1, (February 2007) 134-166; Songying Fang, "The Informational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Domestic Politic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2, No. 2, (April 2008), pp. 304-321

국내정치적으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³⁹⁾

국내정치적 청중비용에 주목한 연구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국내정치적 게임을 고려하여 국제정치 정책을 결정한다는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시도와 함께 민주평화론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논리에 의하면 A국의 정치지도자는 전쟁과 협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전쟁을 선택할 경우 또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무력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에 상대국B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강도의 무력으로 대응할지를 결정하며, 힘의 차이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정해진다. 전쟁의 승패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해득실에 따라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 내의 국내정치 판도가 결정된다. 각국의 연정 파트너는 전쟁을 수행한 정치지도자(또는 여당)와의 연정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다른 정당과의 연정으로 전향할 것인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는 비교적 승리 가능성이 높고 패배 가능성이 낮아야만 전쟁을 선택하며, 되도록이면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된다.⁴⁰⁾ 마찬가지로 논리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는 한번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정권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체주의 국가의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집권을 두고 그만큼 격렬하게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치 정책의 실패가 크게 치명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만큼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다.⁴¹⁾ 즉, 정치체제에 따

³⁹⁾ Paul K. Huth, and Todd L. Allee, "Domestic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the Escalation and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6, No.6, 2002, pp.773-780

⁴⁰⁾ Bruce Bueno de Mesquita and Randolph M. Siverson, "War and the Survival of Political Leaders: A Comparative Study of Regime Types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9, No. 4, (Dec., 1995), pp.841-855; Kenneth A. Schultz, "Domestic Opposition and Signaling in International Cri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4 (Dec., 1998), pp.829-844

⁴¹⁾ Bruce Bueno de Mesquita, James D. Morrow, Randolph M. Siverson, and Alastair Smith,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of the Democratic Peace", *The*

라 정책결정에서 고려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분쟁에서 이루어지는 선택 역시 달라지게 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3.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영토분쟁의 해결 연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관념에 초점을 맞추며, 기존의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유연한 관점을 갖고 있다. 구성주의 이론은 행위자는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시적인 구조에 의하여 사회화되며, 구조는 그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형되므로 행위자와 구조가 서로를 구성한다고 본다. 즉, 국가의 비물질적 관념에 따라 각국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그런 국가들이 모여 국제 체제를 공통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의해 국제체제의 의미와 맥락이 구성된다는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구성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국제규범을 중요하게 다룰 수 밖에 없다. 국제규범은 국제제도에 담겨 국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고정된 진리나 법칙보다는 행위자와 행위자의 관계, 그리고 행위자와 구조의 관계에 주목한다.⁴²⁾

구성주의 이론은 현실주의적 가정이나 자유주의적 전제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이들이 관념적 변수를 놓치고 있기에 이를 유연하게 보완하고자 하기도 한다. 국제제도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이 일부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말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구성주의는 자유주의 못지 않게 제도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이다. 정체성, 규범, 문화, 제도 등이 국제체제를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제도가 담고 있는 규범을 국가가 자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4, (Dec., 1999), pp.799-804

⁴²⁾ Christian Reus-Smit, *The Moral Purpose of th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Martha Finnemore, *The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국의 이익(interests)과 정체성(identity)으로 내면화하면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법이 다른 제도보다 훨씬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국제규범을 받아들이고 또 드러낸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면⁴³⁾ 국제법원이 구성주의적으로 중요한 국제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제법원의 재판을 어떤 형식으로는 경험해본 국가는 국제법원이 분쟁해결 방법으로 효용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전쟁을 불법화하고 평화적으로 정당한 분쟁해결을 지향하는 국제규범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후에도 또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하여 국제법원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국제규범의 내면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민주주의 국가를 꼽기도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내부적으로 법치를 추구하는 규범을 만들어 국가가 행위자가 되는 국제분쟁에서도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며, 그 중에서도 비구속적 제3자 개입보다 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호한다고도 주장한다.⁴⁴⁾ 이와 같이 법치국가가 국제법을 잘 지킬 것이라는 생각은 국제법 학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장 중의 하나다. 대표적으로 야스아키(Onuma Yasuaki)는 ICJ를 별거벗은 임금님으로 비유하며, 설립 초기 국제법원의 판결이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추적하고자 했다. 그는 국내법이 잘 작동하는 국가는 시민들 사이에 법적 해결에 대한 동의와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이듯, ICJ와 국제법 역시 그에 대한 준법문화를 공유하고, 법질서를 훼손함으로써 나쁜 명성을 갖게 되는 것을 꺼리는 국가가 ICJ의 판결을 기꺼이 이행한다고 주장

⁴³⁾ 국제법학에서는 국가와 국제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상위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결론적으로는 국제법원은 국제법을 해석하고 구체화하는 기관일 뿐이며, 국제법은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관습법 자체가 그동안 국가의 외교관습이 굳어져서 인정된 것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은 국가의 집합적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변형되고 발달한다.

⁴⁴⁾ Gregory A. Raymond, "Democracies, Disputes, and Third-Party Intermedia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8 (1), 1994, pp.24-42

하였다. 이때 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선진국이 대체로 그러하고, 반면 법에 의한 문제해결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국가, 특히 제3세계나 저발전국가의 경우 ICJ의 판결을 곧바로 이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⁴⁵⁾ 국내정치의 법치가 국제정치의 법치로 이어진다는 주장으로, 이 또한 매우 구성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평화론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적 규범을 국제정치에 전파하면서 협상과 타협의 문화를 분쟁해결에서도 보편화한다’는 논리 역시 구성주의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국제정치 시스템의 규범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보면 민주주의 국가와 국제분쟁을 하게 되는 상대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타협과 비폭력적 수단을 선호하는 규범을 전파 받는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분쟁해결 방법도 타협적이고 비폭력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⁴⁶⁾ 이들 연구는 영토분쟁만을 한정하여 다루지도 않았고, 제3자 개입을 통한 분쟁해결수단에서 구속적 제3자 개입과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두 분쟁국 중 하나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 그리고 국제체제 내의 민주주의 국가의 비중이 높을 때 국가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제3자 개입을 선호한다는 그의 연구결과는 매우 주목할만하다.⁴⁷⁾

⁴⁵⁾ Onuma Yasuaki, “I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 Emperor without Clothes?”, *International Legal Theory*, Vol. 8, No. 1 (2002), pp.10-13

⁴⁶⁾ William J. Dixon, “Democracy and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1), 1994, pp.16-18; “Third-Party Techniques for Preventing Conflict Escalation and Promoting Peaceful Settl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0 (4), 1996, pp.653-681; “Dyads, Disputes, and the democratic Peace”,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and Peace*, Murray Wolfson ed., 1998, Springer US, pp.103-126.

⁴⁷⁾ Sarah McLaughlin Mitchell and Brandon C. Prins, “Beyond Territorial Contiguity: Issues at Stake in Democratic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999,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3, No.1, pp.169-183.

4.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분쟁당사국 국가쌍의 양자적 특성이 영토분쟁의 분쟁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국방비 지출, 동맹관계, 경제적 상호의존, 민주주의 국가체제적 친밀도를 중요한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가설을 수립하며 그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동맹이론, 경제적 상호의존론, 민주평화론과 같은 주요 국제정치이론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한다.

1) 분쟁당사국 간의 국방비 지출 차이

국가 간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목적은 파워, 즉 권력이다. 국가의 힘, 국력은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영토분쟁에서 분쟁당사국이 강대국인지 여부는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을 국가쌍의 변수를 통해 분석하지 않고, 그보다는 국력의 차이에 주목한다.

국력의 차이 역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특히 구조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세력균형이다. 세력균형의 월등한 설명력을 바탕으로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현재까지도 국제정치 현실을 설명하는 주류이론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국력의 차이가 작으면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국력의 차이가 크면 세력이 불균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력의 차이가 어떻게 ICJ를 통한 영토분쟁의 해결시도로 이어지는지에 대하여서도 역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력균형이론에 맞서, 억지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세력우위이론(Power Preponderance theory)을 빌려 설명할 수 있다. 세력우위이론은 국가가 자국보다 더 강한 국가의 우위에 밀려 현상유지를 선

택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패권안정이론으로도 불린다. 길핀과 모델스키(George Modelski)⁴⁸⁾로부터 시작된 이 논리에 의하면, 국제질서의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한다. 냉전 이후 구조적 현실주의를 주창하여 신현실주의의 장을 열었던 월츠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국제법은 지켜지지만 강대국은 그들이 원하는 때에 법을 속이거나 어긴다”고 말했다.⁴⁹⁾ 이를 엿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기기로 한다.

니카라과 케이스는 니카라과와 미국 간의 국경 근처에서의 군사력 사용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미국이 니카라과의 항구에 지뢰를 부설한 것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ICJ의 1986년 판결을 거부했던 사건으로, 1991년에야 종결되었다. 재판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 판결 결과에 미국이 불응하고, 이에 니카라과가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다가 결국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

1980년, 니카라과는 미국이 반정부 세력에게 군사자금을 대주고 군훈련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니카라과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한 것이라며 1984년에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이에 미국은 엘살바도르를 니카라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미국은 집단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니카라과의 주권 안보에 대한 권리 요구만큼이나 미국의 집단안보 확보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ICJ의 재판 관할권을 벗어나는 사건이라며 재판을 기각해달라는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s)을 제출했다. 그러나 ICJ는 니카라과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⁴⁸⁾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pp.86; George Modelski,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7, pp.102

⁴⁹⁾ “Most international law is obeyed most of the time, but string states bend or break laws when they choose to.” Kenneth Waltz,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1 (Summer 2000), pp. 27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첫번째는 관습법과 조약이 서로 대치되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자구(self-defense)가 침략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국제법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준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주목할 점은 재판 중도에 법정 출두를 거부한 국가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의 부재 하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⁵⁰⁾ 미국이 ICJ가 자국이 제출한 선결적 항변을 기각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본안 재판에서부터 재판 출두를 일방적으로 거부해, 판결이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국 중 한쪽이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유일한 케이스는 아니었다. 이미 1980년의 주테헤란 미국 외교관과 공사직원 사건에서 이란이 재판에 불응하기도 했고⁵¹⁾, 1974년 프랑스가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나란히 피소당한 핵실험 케이스에서도 프랑스가 출두를 거부하기도 했다.⁵²⁾ 그러나 니카라과 케이스가 위 두 사건과 다른 점은, 전자는 초기에는 재판에 참여하였으나⁵³⁾, 이후 불응하였던 것에 반해, 후자는 재판 초기에 불응했으나 결국 본안 재판에서는 참여했다는 점이다. 어느 쪽이든 ICJ는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다만 당사국 중 일방이 부재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니카라과 케이스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뒤이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ICJ에 대한 협조 강제안을 거부함으로써 니카라과에 대한 보상금 지불도 거부하였다. 마침내 1992년 니카라과 정부는 재판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고 니카라과 케이스는 재판을 탐탁찮아하는 강대국이 피소되었다가 재판을 거부한, 국제법의 실패사례로 남았다. 당시 니카라과 변호팀의 일원이었던 라이츨러는 미국 국제법 학계로부터

⁵⁰⁾ Fred L. Morrison, "Legal Issues in the Nicaragua Opin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1, No.1(Jan., 1987), pp.160

⁵¹⁾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24 May 1980

⁵²⁾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Nuclear Test Cases*, 20 Dec. 1974

⁵³⁾ 일방적 제소를 당한 피소국이 재판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선결적 항변으로 제기하는 것 역시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은 ICJ의 명령은 상관하지 않고 자국의 국익을 위한 정책을 선택할 것이며, 이는 모두가 알다시피 ICJ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었다.⁵⁴⁾

그와 별개로 니카라과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굳이 ICJ의 무력함이 드러나게 만든 셈이라고 비난받았다. 일부 국제법 학계에서는 ICJ의 판결이 관습법을 잘 못 해석했으며 이로 인하여 법적 근거를 잃은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⁵⁵⁾ 이들은 곧 ‘니카라과 케이스를 강대국에게 ICJ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서 법을 강화한 사례’라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ICJ는 국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ICJ는 각 당사국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법질서를 수호하고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어야만 한다.⁵⁶⁾

그렇기에 ICJ가 강대국에게 본패를 보여주었다기보다, 강대국이 ICJ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부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여기에 굳이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을 주어로 사용하는 까닭은 법리 해석에 대한 불만은 그 어느 패소국이든 가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판에 대한 불응, 판결에 대한 불이행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니카라과 케이스의 미국처럼 ICJ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대국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니카라과보다 훨씬 국력이 강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⁵⁴⁾ Paul S. Reichler, “Holding America to ITs Own Best Standards: Abe Chayes and Nicaragua in the World Court”,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2, 2001, pp.38

⁵⁵⁾ Anthony D’Amato, “Trash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1, no.1 (Jan., 1987), pp.102-105; Frederic L. Kirgis, “Custom on a Sliding Scal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1, no.1 (Jan., 1987), pp.146

⁵⁶⁾ John L. Hargrove, “The Nicaragua Judgment and the Future of the Law of Force and Self-Defens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1, no.1 (Jan., 1987), pp.140-143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굳이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자국에게 유리한 판세를 장악할 수 있다. 니카라과와 단 둘이서 교섭할 때 미국은 니카라과보다 월등히 강한 국력을 이용하여 니카라과로부터 자국이 원하는 것에 가까운 타협안이나 합의를 이끌어낼 확률이 더 높으리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제3자 개입은 미국이 자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 확률을 깎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니카라과가 ICJ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탐탁치 않았으며, 끝내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고 판결도 불이행하는 것이 훨씬 자국의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었으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현상유지에 성공했다.

니카라과의 입장에서는 국력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해서는 질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러므로 평화적 해결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양자협상은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을 약소국인 니카라과가 제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그리고 일개 국가보다 더 큰 권위에 기댈 수 있는 제3자 개입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특히 구속적 제3자 개입은 판결이 분쟁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니카라과의 입장에서는 승소할 경우, 국제법 및 국제사회의 입김을 빌려 판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애초에 막강한 국력 차이를 이용해 ICJ를 무시함으로써 니카라과는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분쟁의 해결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니카라과 케이스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국력의 차이가 큰 국가 간에는 분쟁 해결을 시도하기보다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현상유지가 선택되기 쉽다. 강대국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상태의 분쟁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카라과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강대국이 무조건 무력사용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국의 태도는 분쟁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 즉, 미국과 니카라과 간의 국력 차이가 무척이나 큰 상태에서 현상유지가

일어나며, 이는 곧 세력우위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력우위이론과 니카라과 케이스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분쟁당사국 간의 국력의 차이를 위 개념을 빌려와 개념화한다. 국력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학계에서 하나로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가장 전통적이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국력 측정 방법은 군사력이다. 하드파워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개념의 국력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뜻하며, 비교적 현대에 와서 제시된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은 아직 그 정체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측정 역시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국력지표 중의 하나인 군사력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군사력 역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한 개념이다. 군사력 측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으며, 영토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서는 2차 핵보복 능력 등을 지표로 활용하는 연구도 있었다.⁵⁷⁾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군사력의 지표로 삼아 분쟁당사국 간의 국방비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통해 군사력을 미루어 짐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력의 차이가 어떻게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시도로 이어지는지 추적한다.

가설 1: 영토분쟁의 분쟁당사국은 양국 간에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클 수록 분쟁해결 시도를 하지 않고, 무력사용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2) 분쟁당사국 간의 동맹관계

동맹관계는 단순히 동맹 밖의 적에 대해서만 유효한 개념이 아니다. 동맹관계 안에서의 동학 역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동맹의 딜레마라는 표현으로도 자주 언급되는 이러한 관계는 동맹

⁵⁷⁾ Huth (1993)

국가 사이의 미묘한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스나이더는 동맹국은 서로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위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맹국가 간에 사이가 밀접할 수록 유사시 상대국의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자국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가 없는 과도한 비용의 지출로 이어지므로 최대한 기피해야 한다. 반대로 동맹국가의 사이가 가깝지 않을 경우 유사시 자국의 분쟁에 상대국이 참여하지 않아, 자국이 방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국이 동맹관계에 들인 비용을 보답없이 지출한 셈이 되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큰 손해가 된다. 그렇기에 국가는 동맹관계에 있어서 상호 관계가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조절해야 한다.⁵⁸⁾

동맹의 방기의 위험이 국가로 하여금 국제법과 관련한 움직임의 실질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던 일례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와 미국의 대립을 볼 수 있다. 미국은 ICC 설립에 대한 논의를 담은 로마규정을 1998년부터 반대해왔다. 그러나 규정의 작성에는 계속 참여했는데, 이는 로마규정과 ICC에 대한 동의에서라기보다 조약 내용 안에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미국이 바라는 바는 구체적으로 ICC가 미국 국적인을 재판의 대상으로 둘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미국인의 재판은 미국인의 손에 맡겨야 한다’며, 미국인 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미국 국내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⁵⁹⁾ 이와 같은 주장은 미국 의회에서 매우 뚜렷하게 지속되어왔으며, 2000년 말 클린턴 행정부 임기 말에 미국이 로마규정에 서명은 했으나, 국내 의회에서 결코 비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시에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뒤이어 등장한 부시 행정부는 2002년 5월, 전임자의 서명을 철회하면서 자국의 군인, 안보정책담당 고위관리 등을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과 기소로부

⁵⁸⁾ Snyder(1984)

⁵⁹⁾ 당시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술은 Diane Marie Amann and M.N.S. Sellers (2002)를 참고.

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⁶⁰⁾ 2002년 7월 ‘비당사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ICC의 기소를 1년간 면책한다’는 결의안(1422호)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된 이후 가속화하여, 로마규정의 제98조 제2항을 근거로 원용하는 불처벌쌍무협정(Status of US Bilateral Immunity Agreements; Article 98 Agreement)을 각국에 요구했다. 로마규정의 제98조 제2항은 본래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미국과 맺는 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의 ‘미국인 범죄자를 미국법정에서 재판한다’는 조항이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활용하여 각국과 불처벌쌍무협정을 맺거나 기존 동맹국 및 미군 주둔 국가와의 SOFA 협약 내용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인이 ICC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끔 의도하였다. 그 일환으로 같은 해 9월 미 의회는 미 군요원 보호법(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 of 2002; APSA)을 통과시켰다. APSA는 미국이나 동맹국의 인명이 구속되거나 수감되었을 경우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서든 구해오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처벌쌍무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불처벌쌍무협정과 APSA를 이용해 미국은 NATO 가입 및 국방예산 지원금의 감축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했다.⁶¹⁾ 이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다. 결국 ICC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⁶⁰⁾ Marc Weller, “Undoing the Global Constitution: UN Security Council Action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Affairs*, Vol.78, No. 4, 2002, pp.698

⁶¹⁾ Georg Nolte,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ilateralism and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Perspectives*, David M. Malone and Yuen Foong Khong ed., pp.71-94, 2003; David Skidmore, “Understanding the Unilateralist Turn in U.S.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Analysis*, 2005, pp.218; Bartram S. Brown, “Unilateralism, Multilateralism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Multilateralism and the U.S. Foreign Policy: Ambivalent Engagement*, Steward Patrick and Shepard Forman ed., pp.323-344, 2002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져나왔다.⁶²⁾ ICJ는 면책권이 국제법상 해당되는 외교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ICC의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처벌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전세계적인 미국과의 불처벌쌍무조약 체결 국면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⁶³⁾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NATO와 유럽연합 사이에서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각기 어느 쪽에 합류하느냐에 따라 ICC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로마규정의 시작부터 ICC 수립에 매우 찬성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국과는 서로 대립하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었으며, 비교적 약소국인 동유럽 국가는 양쪽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정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에서는 결코 강력한 결집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므로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는 미국과의 불처벌쌍무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⁶⁴⁾ 2006년 현재 미국과 불처벌쌍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2개 국가에 달한다.⁶⁵⁾ 조약, 협정 등은 국제법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결국은 강력한 안보를 보장하는 동맹과의 관계가 새로운 형태의 국제법 체계를 생성한 것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ICC 사태에 대하여 취한 태도를 살펴보면 동맹관계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 선택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유추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에게 미국과의 동맹 자체가 자국의 국력을 한층 강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

⁶²⁾ Jack Goldsmith, "The Self-defeating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70, No. 1, 2003, pp.92-98

⁶³⁾ Dapo Akande, "International Law Immunitie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8, No. 3, 2004, pp.407-433

⁶⁴⁾ Jennifer K. Elsea, "U.S. Policy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Gerald M. Kessler ed. *Law and Law Enforcement*, 2006, pp.16-17

⁶⁵⁾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tatus of US Bilateral Immunity Agreements(BIAs)", 2006, <http://www.state.gov/s/l/treaty/c3428.htm>

계를 좋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ICC의 범죄자 처벌 규정과 관련한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게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자국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ICC의 범죄자 처벌 규정에 미국국적인이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국의 국익이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미국과 불처벌쌍무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SOFA 규정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위 사례를 통해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택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동맹이론의 논의를 빌려, 영토분쟁에서도 분쟁당사국 간에 동맹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방기의 딜레마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는 서로 방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무력사용보다는 온화한 분쟁해결 방법, 즉 평화적이고 법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동맹관계에는 그 강도가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단계가 있으므로, 동맹관계가 강할수록 이 경향 역시 더 강해질 것이다.

가설 2: 영토분쟁의 분쟁당사국은 양국 간에 동맹관계가 강할수록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것이다.

3) 분쟁당사국 간의 경제의존

국가는 항상 다른 국가와 상호의존하고 있다. 무역, 관광, 외교 등 초국경적인 교류는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접촉이 증가할수록 마찰의 소지 역시 증가한다. 국제법과 같은 제도는 마찰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심각한 수준의 분쟁을 직면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영토분쟁과 같이 중요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국이 기존에 맺고 있는 상호의존 관계까지 망치는 위험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적인 분쟁해결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중립적인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제3자 개입을 찾을 것이다. 국제법은 합의된 원칙으로 분쟁을 처리하여 분쟁을 비정치화하고, 이와 같은 이슈를 예측가능한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예측가능성은 거래가 번성하고 거래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분쟁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급속한 세계화가 계속되면서 이제 무역은 단순히 비교우위에 따른 이익 추구 수단을 넘어서서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경제적 요소 때문에 전쟁을 피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상주의적 명제가 아니라 중요한 시사점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경제적 의존관계, 특히 무역에서의 교류가 두 국가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례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간의 해양영토분쟁을 들 수 있다.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하면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간에 해양영토분쟁이 발생하였다. 양국의 사이에 위치한 피란(Piran) 만에 대하여 슬로베니아는 만 연안과 연해가 모두 자국 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하였고, 크로아티아는 중간지점에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은 1992년부터 일찌감치 양자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협상은 17년간 계속되면서도 좀처럼 해결되지 못했다. 1999년에는 미국 국방부장관 윌리엄 페리의 중재가 시도되었고, 2001년에는 국경에 대한 합의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합의조약도 완성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슬로베니아가 적극적으로 피란 만의 영유권을 주장한 탓에, 크로아티아의 입장에서는 합의조약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고, 특히 크로아티아 의회가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이에 더하여, 2004년에 슬로베니아가 먼저 EU에 가입하여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양국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신규국가는 영토분쟁 등을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평화적인 수

단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⁶⁶⁾ EU에 가입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기를 원했던 크로아티아의 입장에서는 EU 가입 좌절을 계기로 시급한 분쟁해결이 필요해졌다.

2005년 크로아티아는 공식적으로 법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을 천명하고, 이듬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슬로베니아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법정예 조정과 중재재판을 요청하자고 제안하면서, 양국이 각기 법적 해결수단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하였다. 마침내 2007년 양국은 특별협정에 따라 ICJ에 공동으로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분쟁의 해결을 약속하고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슬로베니아가 협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호조가 뚜렷해졌다. 그 해 말, 스웨덴의 입회 하에 중재재판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2010년 의회 비준을 거쳐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중이다.⁶⁷⁾

주목할 것은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발생한 신생국가들 중 가장 부유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건국 직후부터 경제침체에 시달렸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서기는 했으나, 여전히 눈에 띄는 경제성장은 요원하다. EU에의 가입을 희망한 것도 계속되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에게 같은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인 동시에 아주 가까운 경제교류국이기도 하다. 크로아티아에게 슬로베니아는 4번째로 중요한 수출국이며, 동시에 3번째로 중요한 수입국이다.⁶⁸⁾ 슬로베니아와의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크로아티

⁶⁶⁾ The Helsinki European Council Conclusion in 1999

⁶⁷⁾ Republic of Croat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uropean Integrating, "The Chronology of the Border Dispute Between Croatia and Slovenia", 2009. European Stability Institute의 웹사이트에서 검색. <http://www.esiweb.org/> (검색일: 2014년 5월 23일)

⁶⁸⁾ CIA Factbook- Croat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

아는 EU에 가입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였고, 그 노력은 결실을 맺어 2013년 현재 EU에 가입했다. 슬로베니아에게도 크로아티아는 매우 중요한 경제교류 대상이다. 4번째 주요 수출국이며, 또한 4번째 주요 수입국이다. EU 가입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활발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⁶⁹⁾ 그러므로 양국의 입장에서는 분쟁이 계속될 수록 무역관계가 악영향을 받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았다.

양국이 영토분쟁의 해결에 의지를 다지게 된 것 역시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하려면 영토분쟁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2009년 EU의 경제이사회에서 양국의 분쟁해결을 촉구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크로아티아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이 포함되어, 대부분이 EU 국가이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EU에 가입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슬로베니아와의 영토분쟁을 해결해야 했다.⁷⁰⁾

위 논리를 확대하여 영토분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영토분쟁 중인 분쟁당사국 간에도 분명 무역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영토분쟁이 계속될 수록 양국 간의 무역관계는 점점 약해질 것이다. 이때 무역관계가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분쟁당사국으로서는 영토분쟁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할 동기가 생긴다. 즉, 분쟁당사국 간의 경제의존 정도가 강하다면 영토분쟁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평판을 유지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법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선호할 것이다.

가설 3: 영토분쟁의 분쟁당사국은 양국 간에 경제의존 정도가 강할수록 분

factbook/geos/hr.html (검색일: 2014년 5월 23일)

⁶⁹⁾ CIA Factbook- Sloven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i.html> (검색일: 2014년 5월 23일)

⁷⁰⁾ Hoon Lee, "Economic Globalization and Territorial disputes", <http://www.guleninstitute.org/publications/analyses/> (검색일: 2014년 5월 23일)

쟁을 해결하고자 하며,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호할 것이다.

4) 분쟁당사국 간의 정치체제적 친밀도

민주평화론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를 영토분쟁에 대입하여 살펴본다면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호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아직 학계에서 하나로 합의를 내지 못하였으나,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는 선거를 의식하여 국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무력사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유권자는 이를 기피하고, 그러므로 국가 정책 결정과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주의적으로 볼 때에도 민주주의 국가는 여러 행위자가 동등하게 논의하고 타협하는 규범을 국제사회에도 뿌리내리게 하므로, 이들의 영향력에 의하여 국제분쟁도 평화적인 해결이 더 선호된다고 보았다. 이 설명을 비추어볼 수 있는 국제분쟁의 해결 사례로 알바니아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알바니아는 냉전기 엔베르 호자의 공산주의 독재정권 아래에 있던 나라였다. 소련이 몰락하면서 동유럽 민주화가 시작되었고, 알바니아에서도 1990년부터 연이어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1991년에야 독재 공산정부가 무너지고 민주 공화국이 새로이 수립되었다. 물론 민주화 초기에는 선거로 새로이 정권을 잡은 정치지도자들마저도 언론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정부패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점차 사회가 안정화되고 선거가 꾸준히 치러지는 등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과 이에 대한 시위, 그리고 정권교체 등으로 이어지면서 알바니아의 민주주의는 발전해하고 있다. 2009년에는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했고, 가뭇을 기다리고 있다.⁷¹⁾

⁷¹⁾ CIA Factbook -Alban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l.html> (최종검색일: 2014년 5월 25일)

알바니아 역시 주변국과 국경 및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그리스와의 국경분쟁은 20세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라 여전히 해결이 요원하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양국이 2007년부터 해상국경분쟁에 대하여 양자협상을 하기 시작하여, 결국 2009년에는 정상회의의 형태로 양국이 국경의 해상확정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이다.⁷²⁾

그리스는 일찍이 알바니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가 1991년에 외교관계를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교류가 부쩍 활발해졌으며, 이미 EU의 구성원이었던 그리스는 알바니아가 EU 가입을 희망하자 이를 지지하고 돕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고려하여 두 국가의 관계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오래된 영토분쟁이 갑자기 해결국면에 접어드는 원인으로 경제의존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바니아의 경우, 오랜 독재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탈피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리스가 알바니아와 다시 외교관계를 시작한 것은 알바니아가 민주공화국 정권을 다시 세웠을 때였다. 또한 알바니아는 EU에 대한 구애의 일환으로 자국의 민주주의 및 법치 지향에 대하여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2013년 10월에 있었던 UN 총회 제6위원회에서 알바니아 대표는 “평화와 안보, 발전과 인권을 국가의 안팎으로 가장 잘 보장해주는 것은 법치”라고 말하며, “(법치가) 자국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간의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고, 또한 “발칸 반도의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게 알바니아의 민주화가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었다”고 밝

⁷²⁾ Alba Cela and Sashenka Lleshaj, “Albanian Greek Relations from the Eyes of the Albanian Public - Perceptions 2013”, Alban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March, 2014; Hellenic Communication Service. (2009). “Greece, Albania Sign Continental Shelf Pact”. <http://www.helleniccomserve.com/greecealbaniasign.html> (최종검색일 2014년 5월 25일)

했다.⁷³⁾ 알바니아의 민주주의 정도는 아직 발전단계에 있으나, 그럼에도 독재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 국가체제를 전환한 이후 국제법 체계와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의지가 많아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와의 육상 영토분쟁은 아직 해결이 요원하나, 해상경계분쟁이라도 평화적인 분쟁해결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장족의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직접적인 무력을 동원하지 않을 뿐이다.⁷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 국제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알바니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국제사회와 국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정도가 커지며, 제도를 통한 타협과 합의에 기반한 갈등 해결을 선호하므로 영토분쟁이 발생할 경우 평화적이고 법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확률 역시 높아지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영토분쟁의 분쟁당사국은 양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호하고, 또한 법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호할 것이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고찰하였다. 영토분쟁의 해결수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수단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를 통하여 “어떤 국가가 어떤 환경

⁷³⁾ GA/L/3457, 10 Oct. 2013

⁷⁴⁾ Zeev Maoz and Bruce Russett, “Normative and structural causes of democratic peace, 1946-19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7, No.3, 1993, pp.624-638

에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무력사용을 선택하고,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며, 그 중에서도 법적인 해결수단을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증적인 결론을 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주로 사용되는 분쟁해결 수단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분쟁해결 현실과 밀접한 설명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국가가 분쟁해결에 대하여 내리는 선택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이나 양자협상, 구속적/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모두 같은 수준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무력사용과 평화적 해결수단, 또는 무력사용과 양자협상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는 연구가 많았고, 또한 양자협상과 제3자 개입만을 따로 두고 비교하는 등의 연구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분쟁당사국의 특징을 고려하여 여러 분쟁해결 수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더욱 의미있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핵심 변수인 분쟁당사국 간의 군사력 지출의 차이, 동맹관계,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친밀도를 구체화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이론적 틀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국제정치이론, 동맹이론, 전략적 선택에 대한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과 연구 결과를 도입하여 각 가설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또한 실제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분쟁해결수단 선택이 각 가설과 맥락을 같이 했던 사례를 선정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인과관계를 짚어봄으로써 가설의 설득력을 더했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영토분쟁의 분쟁당사국은 양국 간에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클 수록 분쟁해결 시도를 하지 않고, 무력사용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영토분쟁의 분쟁당사국은 양국 간에 동맹관계가 강할수록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것이다.

가설 3: 영토분쟁의 분쟁당사국은 양국 간에 경제의존 정도가 강할수록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며,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호할 것이다.

가설 4: 영토분쟁의 분쟁당사국은 양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호하고, 또한 법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호할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 대상

1) 분석대상

(1) 영토분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의 선택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영토분쟁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토분쟁이 발생 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영토(territory)와 국경(boundary; border)이다. 영토는 한 국가의 주권과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을 말하고, 국경은 영토 개념의 일부로서 영토의 경계 지역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영토분쟁은 영토에 대한 것은 영유권분쟁(territorial dispute)로 구분할 수 있고, 국경에 대한 것은 국경분쟁(boundary dispute; border dispute)으로 다르게 부를 수 있다. 영유권분쟁은 영토가 어디에 속하고 어떻게 나뉘어지는지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둘러싼 분쟁을 말하며, 국경분쟁은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된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분쟁을 의미하기도 한다.¹⁾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영토분쟁은 광의의 개념으로, 위에서 언급된 영유권분쟁, 국경분쟁을 모두 함께 다룬다.

¹⁾ 배진수, 윤지훈,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동북아역사재단, 2008, pp.10

영토분쟁을 말할 때에 분쟁의 시작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역시 논쟁의 대상이다. 영토분쟁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데이터셋인 ICOW에서는 분쟁의 시작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민족국가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해당 이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가 도전국(challenger)이 되며, 의문을 제기당하는 국가는 대상국(target)이라고 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두 국가가 모두 도전국이 될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기로는, 민족국가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다른 민족국가에 의해 마찬가지로 주권이 주장되었거나 또는 관리되는 영토의 한 부분에 대하여 주권이 있음을 명백한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주장은 제외된다. 영토와 관련하여 분명한 지시대상이 언급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발언 역시 제외한다. 또한 어로나 해양구역, 대륙붕, 남극에 있는 영토에 대한 영토분쟁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섬에 대한 주장은 포함된다.²⁾ 해양영토분쟁에는 도서 영유권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분쟁이 있다. 일반적으로 후자에는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경계선이 포함되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영해의 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분쟁은 영토분쟁이라기 보다는 관할권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2)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크게 무력사용과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²⁾ Paul Hensel, "Contentious Issues and World Politics: The Management of Territorial Claims in the Americas, 1816-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5. No.1, 2001, pp.81-109

무력사용 무력사용은 말 그대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국제연합 헌장에서 침략전쟁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³⁾하고 있으므로, 현대에 와서는 대대적인 선전포고로 시작하는 근대적 의미의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영토분쟁의 인접지역에의 병력 주둔 및 점령 등으로 시작하여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 등부터 무력사용으로 볼 수 있다.

양자협상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은 크게 양자협상과 제3자 개입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양자협상은 가장 많이 시도되는 분쟁해결 수단이기도 하다. 분쟁의 법적인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라도 양자협상을 통한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면 더욱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기 마련이다. 양자협상은 분쟁당사국이 원하는 기간 동안 계속되며, 당사국의 의견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후 재개되기도 한다. 그만큼 분쟁당사국이 자유롭게 형식과 진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약은 일정 기간 동안 양자협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을 넘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면 당사국 중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3자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양자협상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은 조약 운영에 관련된 분쟁이 당사국 사이에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적인 경로로 해결을 시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반드시 그 안에서만 분쟁의 해결을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⁴⁾

비구속적 제3자 개입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운 분쟁의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이 시도된다. 제3자 개입을 통한 분쟁의 해결수단은 크게 결과가 당사국에게 구속력을 갖는 사법적 해결, 즉 구속적 제3자 개입과 구속력을 갖지

³⁾ UN헌장 제2조 3항 및 4항, 제33조 1항.

⁴⁾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2, pp.840

못하는 비사법적(외교적) 해결, 즉 비구속적 제3자 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의 세부항목으로 주선(good office), 중개(mediation), 심사(inquiry), 그리고 조정(conciliation) 등을 들 수 있다. 주선은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고 분쟁당사국 간의 외교 교섭의 타결에만 관여하는 방안이다. 개입하는 제3자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다. 중개는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도 관여하여 분쟁 당사국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해결책 또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분쟁이 해결되도록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주선과 중개의 차이는 제3자가 개입하는 정도이다. 심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하여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실관계 자체만 명확하게 밝혀져도 분쟁의 타결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조정은 제3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조건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사와 중개의 기능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양자협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중재재판이나 국제법원의 재판같은 구속적 제3자 개입보다는 비용도 적고 시간도 적게 든다.⁵⁾

구속적 제3자 개입 구속적 제3자 개입은 중재재판과 국제법원의 재판으로 나뉘어진다. 중재재판은 분쟁당사국이 직접 선정한 재판관에 의하여 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분쟁을 구속력 있는 판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중재재판의 결과는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비구속적 제3자 개입과 구분된다. 그러나 중재재판은 분쟁당사국이 재판관과 재판의 준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원의 재판과 다르다. 그러므로 중재재판의 재판관은 중재자(arbitrator)라고 불리고 재판결과도 판결(judgment)이 아니라 판정(award)이라고 불린다. 중재재판은 절차, 재판관, 재판범위 등에 대하여 분쟁

⁵⁾ 정인섭, 2013, pp.841-842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임의적인 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협적인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분쟁 당사국의 합의에 기반하여 중재재판이 이루어지다보니 판정 결과에 대하여 본래의 합의를 지키기 않았다고 패소국이 꼬투리를 잡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다.⁶⁾

국제법원의 재판은 대표적으로 ICJ의 재판을 들 수 있다. ICJ는 국제연합이 9년 임기로 선출한 15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일종의 국제 사법부이다. 그러나 ICJ를 세계의 대법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ICJ의 사법권을 거부할 수 있고, 국가가 설사 ICJ의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ICJ를 통해 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분쟁당사국의 몫이다. 국가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적다. 이때 제소는 당사국들이 국제법적으로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ICJ에 판결을 요청하기로 합의하고 제소하는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과 당사국 중 일국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는 일방적 제소로 나뉜다. 특별협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재판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개념이 없다. 또한 당사국들이 국제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에 제소하였으므로 국제법원의 재판관할권(jurisdiction)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권국가의 별도의 동의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그러므로 곧장 본안(merits) 판결에 들어간다. 그러나 일방적 제소의 경우에는 제소국과 피소국이 구분되며, 피소국이 재판이 국제법원의 관할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쟁의 해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⁷⁾

⁶⁾ 정인섭, 2013, pp.843-844

⁷⁾ ICJ의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Rosenne (1957), Rosenne (2003)

2) 분석 시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시기는 1870년부터 2001년까지로 설정한다. 이는 현존하는 영토분쟁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영토분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연구를 진행하며, 시기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영토분쟁 데이터만을 보면 1816년부터 분석이 가능하나, 이후 독립변수 중 국가 간 무역에 대한 데이터가 1870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앞선 시기의 것은 분석이 불가능하다.

데이터의 시간적 범주가 매우 넓기 때문에 양차대전 및 냉전의 전후가 서로 다른 국제정치 환경을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토분쟁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허스와 엘리는 실제로 1919년에서 1995년 사이의 영토분쟁의 수를 1945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는데, 전체 영토분쟁의 수는 1945년 이전이 157건, 이후에는 133건이며, 두 기간에 모두 겹치는 분쟁은 58건이다.⁸⁾ 2차대전 전후로 영토분쟁의 분포가 크게 달라졌다고 볼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영토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 달라졌다. 이는 북미 및 유럽의 경우 영토 경계에 대한 확정이 비교적 일찍 이루어진 데에 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였던 국가가 차례로 독립하면서 발생하는 영토분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독립변수가 북미 및 유럽에 한정하여 특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가 아니며, 전 세계의 모든 주권국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⁸⁾ Huth and Allee (2002), pp.27

2. 데이터 및 변수 설정

1) 분석단위와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ICOW의 영토분쟁 데이터(Territorial Dataset)⁹⁾을 바탕으로, 2014년 현재까지 진행된 영토분쟁 125건에 대하여 이벤트 데이터(event dataset)를 구축하여 이를 연구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한다. 해당 자료는 영토분쟁의 시작인 영유권주장이 처음 공식적으로 나타난 시기부터 종결된 시기까지를 담은 영유권주장(ICOW Territorial Claim Dataset) 데이터와 영토분쟁의 각 해결수단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끝난 시기까지를 담은 해결수단(ICOW Settle Dataset) 데이터로, 이를 이벤트 단위(event level)와 국가쌍 단위(dyad-level)를 결합한 이벤트-국가쌍 단위(event-non-directed-dyad-year)로 조작화하여 사용한다.

국제정치학 분과의 갈등 연구(conflict study)에서 국가쌍 단위의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쌍 간에 복수의 영토분쟁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쌍 단위로 분석하면 중복되는 영토분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보통 국가쌍 단위는 방향성이 있는 것(directed dyad)과 방향성이 없는 것(non-directed dyad)로 구분된다. 방향성이 있다함은 특정 행위를 야기한 국가와 그 대상이 되는 국가, 수출을 하는 국가와 수입을 하는 국가 등과 같이 두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쟁당사국 간의 차이에 집중하므로 방향성이 없는 국가쌍 단위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또한 분쟁 단위로 연구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연구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영토분쟁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분쟁 단위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한다. 첫째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국경지대나 영토가 반드시 두 국가

⁹⁾ Hensel et. al. (2008); The ICOW Territorial Claims Data Set
<http://www.paulhensel.org/icowterr.html> (최종 검색일: 2014년 5월 25일)

간에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독립변수로 양자적 특성 외에 분쟁당사국들의 다자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통계적으로 분석 가능한 수준의 표본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각각의 분쟁에 방향성 없이 두 개의 국가로 국가쌍을 결합한 분석단위를 사용한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영토분쟁의 분쟁해결 수단 선택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것과 시도하지 않는 것, 둘째로 분쟁해결 수단을 폭력적인 것과 폭력적이지 않은(평화적인) 것, 셋째로 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넷째로 구속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점차 심화되어 분쟁당사국이 ‘평화적이고 적법하며 법에 의해 구속되는 분쟁해결 수단’, 즉 구속적 제3자 개입(국제법원의 재판)을 영토분쟁의 해결수단을 선택하는 여부까지 추적한다.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할 때에 단순히 선택지가 5지선다 식으로 제시되어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라면 종속변수의 설정이 보다 간편하겠으나, 실제로 분쟁해결 수단의 선택은 게임트리처럼 선택과 선택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네 단계에 걸쳐 양자선택의 기로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구속적 제3자 개입까지 분쟁당사국의 선택이 이어지는 경로를 분쟁해결에 대한 시도로부터 시작하여 짚어나가는 방식이다. 데이터로는 이미 서술하였듯이 ICOW의 영토분쟁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첫번째 단계에서는 분쟁해결을 시도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분쟁해결을 시도하지 않는 것을 0으로, 시도하는 것을 1로 보고 값을 매긴다. 이를 통하여 분쟁해결에의 적극성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 총 10,017개의 양자관계-연도의 종속변수 관측치 가운데, 첫번째 단계에서 1의 값을 갖는 관측치는 2,115개이다. 즉, 전체 10,017번의 잠재적인 분쟁해결 기회 가운데 실제로 분쟁해결을 시도한 비율은 전체의 약 21%인 2,115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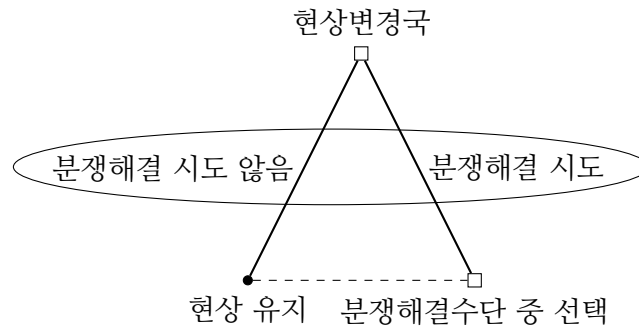


그림 III.1: 첫번째 단계

두번째 단계는 무력사용과 평화적 수단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여부이다. 무력사용을 선택하는 경우에 0, 평화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 1의 값을 주었다. 두번째 단계에서 전체 관측치 2,115개 중에 0의 값을 갖는 관측치는 436개이며, 1의 값을 갖는 관측치는 1,679개이다. 다시 말해 전체 2,115번의 실제 분쟁해결 기회 가운데, 무력사용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한 것은 전체 중에 436번으로, 전체의 약 20%이다. 반면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한 것은 전체의 약 80%로 1,679번이다.

다음으로 세번째 단계에서는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 중에서 양자협상과 제3자 개입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느 것을 고르는지를 살펴본다. 두 수단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분쟁당사국끼리만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지, 아니면 제3자가 개입하여 함께 분쟁해결 방법을 모색하는지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양자협상에 0의 값을 매기고, 제3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3자 개입에 1의 값을 매긴다. 세번째 단계에서 평화적인 해결수단을 선택한 전체 관측치는 1,803개이다. 두번째 단계에서 세번째 단계로 오면서 전체 관측치가 조금 늘어난 것은 해마다 분쟁해결 수단을 중복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 해에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과 무력사용을 모두 선택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력사용이 분쟁당사국의 분쟁해결 의지 및 실행에서 더 비용이 큰 것이라고 보고 그 적극성을 고려하여 두번째 단계에서는 평화적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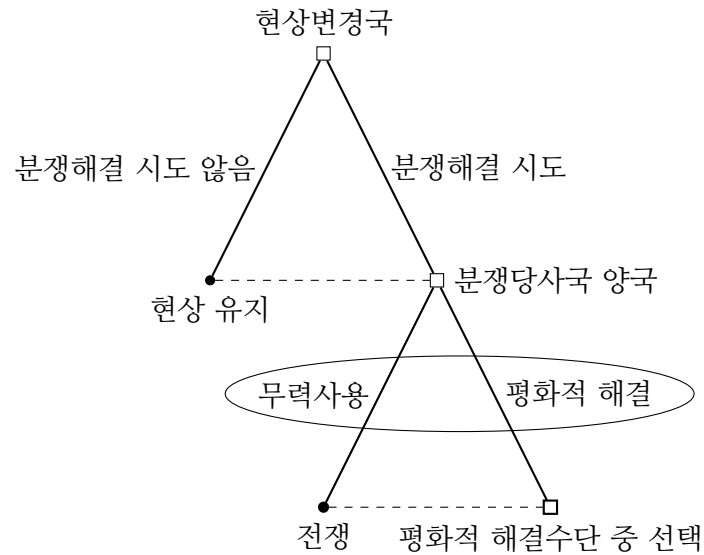


그림 III.2: 두번째 단계

결수단과 무력사용이 겹치는 경우 무력사용을 우선으로 하여 값을 매겼다. 반면 세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평화적 해결수단 선택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관찰값이 조금 늘었다. 이렇게 구성된 세번째 단계에서 1의 값을 갖는 것은 577개로, 약 32%이다. 그러므로 평화적인 해결수단을 선택한 경우 양자협상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의 약68%로 총 1,226번이고, 제3자 개입을 선택한 비율은 약32%로 총 577번이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단계에서는 제3자 개입을 선택한 이후, 분쟁당사국이 구속적인 제3자 개입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비구속적인 제3자 개입을 선택하는지를 추적하였다. 비구속적인 제3자 개입은 흔히 외교적 해결수단이라고도 불리며, 구속적인 제3자 개입은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작용하므로 법적 해결수단이라고도 불린다. 외교적 해결수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단이므로 0의 값을 주었고, 법적 해결수단은 구속력이 있는 수단이므로 1의 값을 주었다. 이때에도 위와 같이 세번째 단계에서 양자협상을 더 먼저 세웠으나, 네번째 단계에서는 제3자 개입 선택을 모두 세웠으므로 관찰값이 조금 늘어났다. 네번째 단계에서 제3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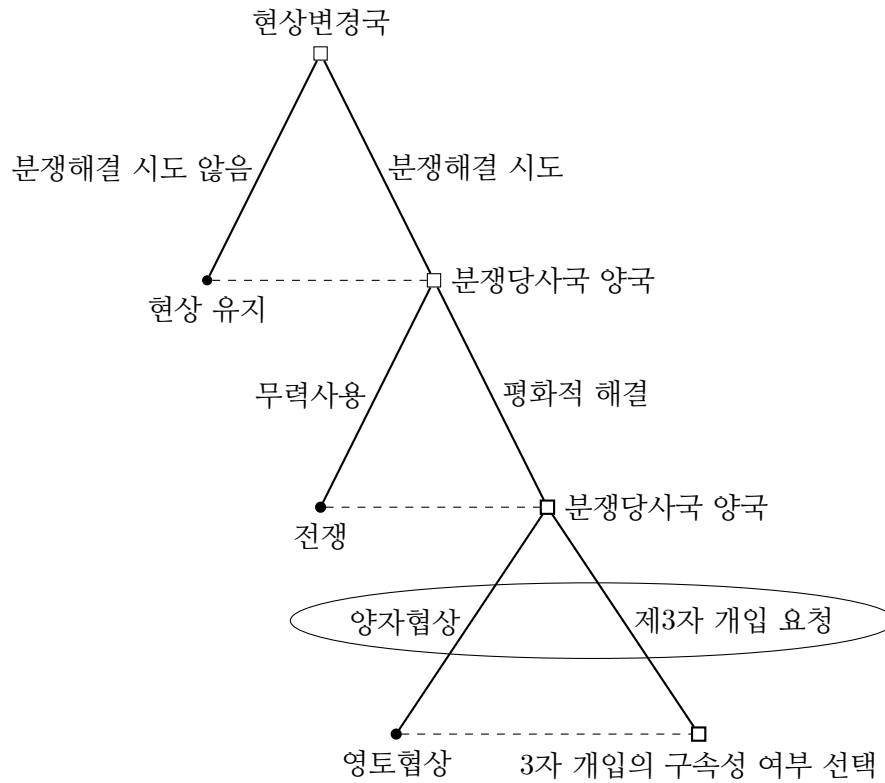


그림 III.3: 세번째 단계

개입을 선택한 전체관측치는 678개로, 그 중에서 1의 값을 갖는 관측치는 174개이다. 이는 곧 제3자 개입을 선택한 총 678번 중에서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택한 것이 약 74%로 504번이며, 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택한 것은 약 26%로 174번이다.

3) 핵심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분쟁당사국 간의 방향성이 없는 양자적(non-directed dyadic) 특성에 주목한다. 분쟁이 시작할 때 먼저 영유권 주장을 하는 도전국과 기존에 분쟁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국이 정해지는데, 많은 분쟁에서 분쟁당사국인 두 국가가 모두 도전국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분쟁의 발생시점에 대한 연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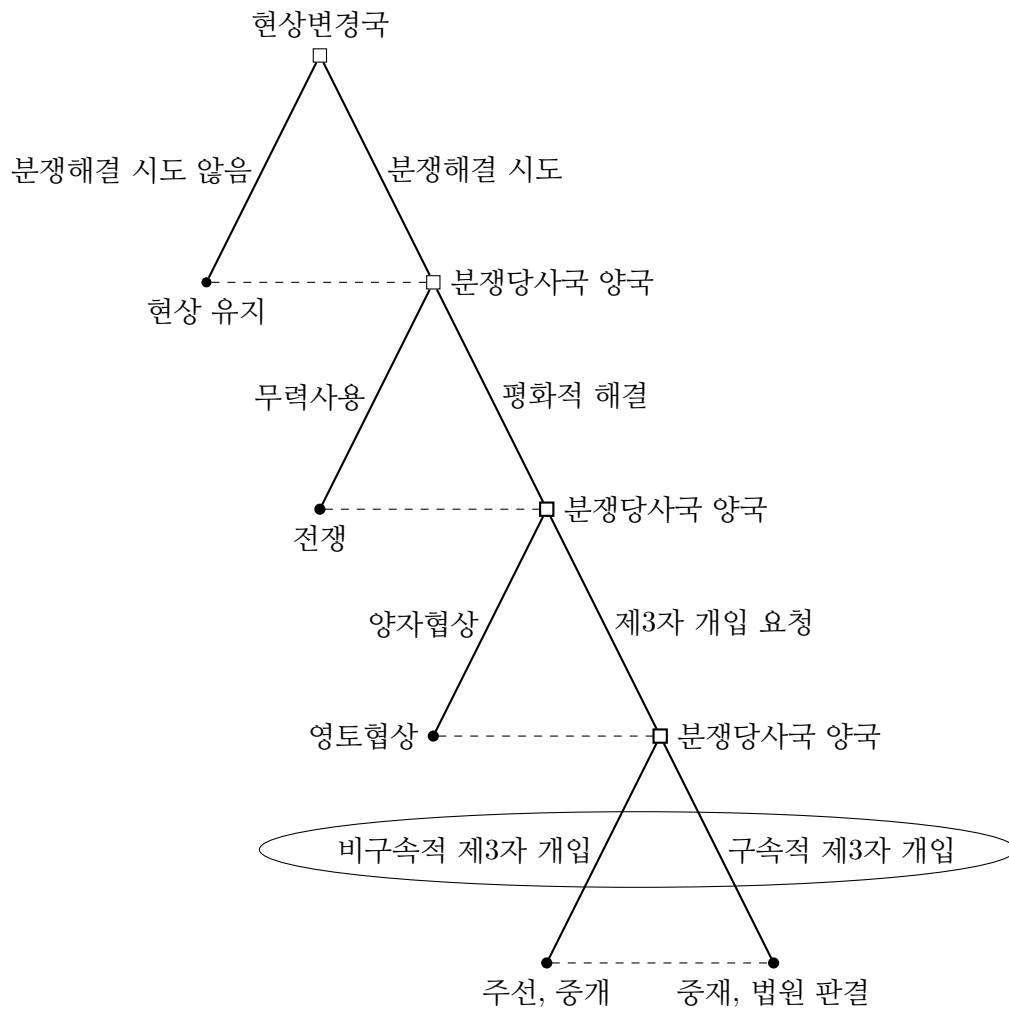


그림 III.4: 네번째 단계

한다면 도전국과 대상국을 구분하고, 각각의 방향성에 따른 양자적 특성을 연구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발생시점에 주목하지 않고 분쟁의 전개과정에서 국가들이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선후를 따지기보다 두 국가 간의 차이나 관계의 밀접한 정도에 주목하고 이를 각각 가설에 따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III.1: 종속변수의 값과 분포

종속변수	0	1	총계
첫번째 단계	분쟁해결을 시도하지 않음 7,902건	분쟁해결을 시도함 2,115건 (21.11%)	10,017건
두번째 단계	무력사용 선택 436건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 선택 1,679건 (79.39%)	2,115건
세번째 단계	양자협상 선택 1,226건	제3자 개입 선택 577건 (32.00%)	1,803건
네번째 단계	비구속적 제3자 개입 선택 504건	구속적 제3자 개입 선택 174건 (25.66%)	678건

(1) 분쟁당사국의 국력 차이

국력은 쉽게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이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력 지표는 국가능력종합지표(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 CINC)로, 1983년부터 싱어(David J. Singer)가 Correlates of War(COW) 프로젝트에서 만든 양적 데이터이다.¹⁰⁾ 싱어는 인구, 경제력, 군사력이 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고, GDP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국력의 지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CINC는 비록 하드파워만 측정할 수 있고 그 외의 종합적인 국력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국제정치 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한 가장 많이 알려진 국력 지표이다. CINC가 국력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세부 지표는 총 6가지가 있다. 전 세계 대비 총 인구 비율, 전 국토 대비 도시 인구 비율, 전 세계 대비 철강 생산량 비율, 주요 에너지 소비 비율, 전 세계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 전 세계 대비 군병사 수 비율이다. 위 여섯 지표의 평균이 CINC 값이다.

¹⁰⁾ Singer (1972)를 참고. 2014년 5월 현재 4.0버전이 이용가능하므로 이를 사용하였다. 1816년부터 2007년까지의 데이터 값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CINC가 제공하는 국방비 지출 비율을 선택해 국력을 측정한다. 분쟁당사국이 무력사용과 평화적 분쟁해결 중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 국방비 지출 정도가 군사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쟁당사국 중 국방비 지출이 더 적은 측의 지출규모를 양국의 국방비 지출의 합으로 나눈다. 즉, 두 국가의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을 수록 0.5에 가까운 값이 된다.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값을 1에서 뺀 차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방비 차이가 작을 수록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국방비 차이가 클 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된다.

다음 표는 분쟁당사국의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은 25%와 차이가 큰 25%를 비교한 것이다. 표 III.2에서는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국가 간에는 영토분쟁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에서는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국가 간에 평화적 수단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에서는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국가 간에는 양자협상을 제3자 개입선택보다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앞선 다른 종속변수와의 비교에서보다 그 정도가 작다. 표 III.5에서는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국가 간에는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구속적 제3자 개입보다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네 가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III.2: 국방비 지출의 차이와 영토분쟁 해결 시도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표

	0 (시도하지 않음)	1 (시도함)	총계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음	1,483 (72.91%)	551 (27.09%)	2,034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큼	1,772 (83.78%)	343 (16.22%)	2,115
총계	3,255 (78.45%)	894 (27.06%)	4,149

Pearson $\chi^2(1) = 72.4993$ Pr = 0.000

표 III.3: 국방비 지출의 차이와 무력사용/평화적 수단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무력사용 선택)	1 (평화적 수단 선택)	총계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음	146 (26.50%)	405 (73.50%)	551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큼	53 (15.45%)	290 (84.55%)	343
총계	199 (22.26%)	695 (77.74%)	894

Pearson $\chi^2(1) = 14.9041$ Pr = 0.000

표 III.4: 국방비 지출의 차이와 양자협상/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양자협상 선택)	1 (제3자 개입 선택)	총계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음	269 (60.45%)	176 (39.55%)	445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큼	210 (69.77%)	91 (30.23%)	301
총계	479 (64.21%)	267 (35.79%)	746

Pearson $\chi^2(1) = 6.7837$ Pr = 0.009

표 III.5: 국방비 지출의 차이와 비구속적/구속적 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비구속적 3자 개입)	1 (구속적 3자 개입)	총계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음	139 (65.88%)	72 (34.12%)	211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큼	90 (84.91%)	16 (15.09%)	106
총계	229 (72.24%)	88 (27.76%)	317

Pearson $\chi^2(1) = 12.7396$ Pr = 0.000

(2) 동맹관계

동맹관계에 대해서는 COW의 공식 동맹 데이터(Formal Alliance Dataset)에서 제공하는 1816-2012년 간의 데이터를 활용한다.¹¹⁾ 국가 간의 동맹관계는 각각 방위조약(defense pacts), 중립조약(neutrality pacts), 우호조약(ententes), 불가침조약(non-aggression pact)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방위조약, 중립조약, 그리고 우호조약에 비하여 불가침조약은 효력이 강하지 않은 조약이다. 그러므로 따로 구분하여 변수를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에서는

¹¹⁾ Gibler (2009); Singer (1966) 참고.

방위조약, 중립조약, 우호조약을 모두 맺지 않은 관측치가 모두 불가침조약은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 어떤 관측치도 네 가지 조약을 모두 맺지 않은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방위조약, 중립조약, 그리고 우호조약 중 하나라도 맺은 국가 간에는 동맹관계가 있다고 보고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동맹관계가 없다고 보고 0의 값을 주었다.

다음 표는 동맹관계가 있고 없음에 따라 영토분쟁의 분쟁해결수단 선택에 있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표 III.6에서는 동맹관계의 유무가 영토분쟁의 해결 시도 여부에 큰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차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III.7에서는 동맹관계가 있을 경우, 무력사용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큰 차이는 아니며,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다. 표 III.8에서는 동맹관계가 있을 경우 양자협상보다 제3자 개입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 표 III.9에서는 동맹관계가 있을 때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구속적 제3자 개입보다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III.6: 동맹관계와 영토분쟁 해결 시도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표

	0 (시도하지 않음)	1 (시도함)	총계
동맹관계 없음	5,072 (79.00%)	1,348 (21.00%)	6,420
동맹관계 있음	2,692 (78.53%)	736 (21.47%)	3,428
총계	7,764 (78.84%)	2,084 (21.16%)	9,848

Pearson $\chi^2(1) = 0.3001$ Pr = 0.584

표 III.7: 동맹관계와 무력사용/평화적 수단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무력사용 선택)	1 (평화적 수단 선택)	총계
동맹관계 없음	269 (19.96%)	1,079 (80.04%)	1,348
동맹관계 있음	161 (21.88%)	575 (78.12%)	736
총계	430 (20.63%)	1,654 (79.37%)	2,084

Pearson $\chi^2(1) = 1.0711$ Pr = 0.301

표 III.8: 동맹관계와 양자협상/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양자협상 선택)	1 (제3자 개입 선택)	총계
동맹관계 없음	269 (72.53%)	320 (27.47%)	1,165
동맹관계 있음	367 (59.77%)	247 (40.23%)	614
총계	1,212 (68.13%)	567 (31.87%)	1,779

Pearson $\chi^2(1) = 30.1509$ Pr = 0.000

표 III.9: 동맹관계와 비구속적/구속적 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비구속적 3자 개입 선택)	1 (구속적 3자 개입 선택)	총계
동맹관계 없음	267 (70.82%)	110 (29.18%)	377
동맹관계 있음	225 (77.85%)	64 (22.15%)	289
총계	492 (73.87%)	174 (26.13%)	666

Pearson $\chi^2(1) = 4.1918$ Pr = 0.041

(3) 분쟁당사국 간의 경제의존

두 국가의 경제의존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¹²⁾ 본 연구에서는 양자무역량(bilateral trade flows)을 고려하여 경제의존도를 측정한다. 양자무역량은 COW의 국제무역 데이터(International Trade data)를 사용한다. 이 데이터는 1870년부터 2009년 사이의 무역량 정보를 제공하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영토분쟁 데이터의 1816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전체 관측치가 작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¹²⁾ 무역의존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존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로는 Mansfield (2001)를 참고.

다음 표는 분쟁당사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에 따라 영토분쟁의 분쟁 해결수단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표 III.10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강한 국가 간에는 영토분쟁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작은 폭이지만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III.11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강한 국가 간에는 무력사용보다 평화적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III.12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한 국가 간에는 양자협상보다 제3자 개입을 더 많이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III.13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한 국가 간에는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III.10: 경제적 상호의존과 영토분쟁 해결시도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표

	0 (시도하지 않음)	1 (시도함)	총계
경제적 상호의존이 약함	1,429 (72.79%)	362 (20.21%)	1,791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함	3,531 (77.01%)	1,054 (22.99%)	4,585
총계	4,960 (77.79%)	1,416 (22.21%)	6,376

Pearson $\chi^2(1) = 5.7441$ Pr = 0.017

표 III.11: 경제적 상호의존과 무력사용/평화적 수단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무력사용 선택)	1 (평화적 수단 선택)	총계
경제적 상호의존이 약함	91 (25.14%)	271 (74.86%)	362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함	175 (16.60%)	879 (83.40%)	1,054
총계	266 (18.79%)	1,150 (81.21%)	1,416

Pearson $\chi^2(1) = 12.8650$ Pr = 0.000

표 III.12: 경제적 상호의존과 양자협상/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양자협상 선택)	1 (제3자 개입 선택)	총계
경제적 상호의존이 약함	218 (72.91%)	81 (27.09%)	299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함	630 (69.77%)	273 (30.23%)	903
총계	848 (70.55%)	354 (29.45%)	1,202

Pearson $\chi^2(1) = 1.0675$ Pr = 0.302

표 III.13: 경제적 상호의존과 비구속적/구속적 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비구속적 3자 개입)	1 (구속적 3자 개입)	총계
경제적 상호의존이 약함	65 (73.03%)	24 (26.97%)	89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함	260 (77.61%)	75 (22.39%)	335
총계	325 (76.65%)	99 (23.35%)	424

Pearson $\chi^2(1) = 0.8235$ Pr = 0.364

(4) 분쟁당사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적 친밀도

민주평화론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평화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가설을 채택하였으므로 분쟁당사국의 정치체제가 서로 비슷한 정도에 대하여 변수를 설정한다. 이를 위하여 민주주의적 성숙도는 폴리티4(PolityIV) 데이터를 사용한다.¹³⁾ 폴리티 4 데이터는 1800년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 체제 지수(DEMOC)를 사용하여 양국이 공통의 정치체제인지 여부를 측정한다.

국가 체제 지수는 가산적(additive) 측정변수이다. 서로 상호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다른 변수의 효과를 합하고 평균을 내어 만든 변수이며 0부터 10까지 열한가지 값을 갖는다. 숫자가 작을 수록 덜 민주적인 체제이며, 숫자가 클 수록 더 민주적인 체제임을 뜻한다. 분쟁당사국인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비슷할 수록

¹³⁾ Center for Systemic Peace, <http://www.systemicpeace.org/inscrdata.html> (최종 검색일: 2014년 5월 25일)

각국의 폴리티4의 민주주의 체제 지수가 같은 값에 가까울 것이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하여 이때의 차를 10에서 뺀 값을 사용한다. 즉, 양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비슷할 수록 10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정치체제가 다를 수록 0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한 국가의 체제는 민주주의적인 속성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속성이 모두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하지 않고 민주주의 지수만을 사용한다.

다음 표는 분쟁당사국 간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비슷한 정도에 따라 영토 분쟁의 분쟁해결수단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표 III.14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친밀한 정도가 영토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 여부에 있어서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교차분석 결과이다. 표 III.15에서도 역시 무력사용과 평화적 수단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III.16에서도 양자협상과 제3자 개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친밀도가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표 III.17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친밀한 정도가 높은 국가 간에는 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고,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4: 민주주의 정치체제 친밀도와 영토분쟁 해결 시도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표

	0 (시도하지 않음)	1 (시도함)	총계
민주주의 체제가 친밀하지 않음	1,593 (79.57%)	409 (20.43%)	2,002
민주주의 체제가 비슷함	1,884 (80.75%)	449 (19.25%)	2,333
총계	3,477 (80.21%)	858 (19.79%)	4,335
Pearson $\chi^2(1) = 0.9514$ Pr = 0.329			

표 III.15: 민주주의 정치체제 친밀도와 무력사용/평화적 수단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무력사용 선택)	1 (평화적 수단 선택)	총계
민주주의 체제가 친밀하지 않음	63 (15.40%)	346 (84.60%)	409
민주주의 체제가 친밀함	75 (16.70%)	374 (83.30%)	449
총계	138 (16.08%)	720 (83.92%)	858

Pearson $\chi^2(1) = 0.2681$ Pr = 0.605

표 III.16: 민주주의 정치체제 친밀도와 양자협상/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양자협상 선택)	1 (제3자 개입 선택)	총계
민주주의 체제가 친밀하지 않음	271 (74.25%)	94 (25.75%)	365
민주주의 체제가 친밀함	285 (74.41%)	98 (25.59%)	383
총계	556 (74.33%)	192 (25.67%)	748

Pearson $\chi^2(1) = 0.0027$ Pr = 0.959

표 III.17: 민주주의 정치체제 친밀도와 비구속적/구속적 제3자 개입 선택에 대한 교차분석표

	0 (비구속적 3자 개입)	1 (구속적 3자 개입)	총계
민주주의 체제 친밀하지 않음	92 (80.00%)	23 (20.00%)	115
민주주의 체제 친밀함	71 (60.17%)	47 (39.83%)	118
총계	163 (69.96%)	70 (30.04%)	233

Pearson $\chi^2(1) = 10.8973$ Pr = 0.001

4) 통제변수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분쟁당사국간의 양자적 특성을 핵심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갖는 영향력과 상관관계를 더욱 정확히 측정하고, 또 양자관계 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분쟁당사국 중 도전국과 대상국의 개별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1) 공통의 동맹 포트폴리오

공통의 동맹관계를 핵심변수로 넣은 것에 더하여, 두 국가의 동맹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변수¹⁴⁾를 포함한다. 국가는 자국이 현상유지를 원하거나 또는 현상변경을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져 타국과 동맹을 맺는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동맹을 맺는 양상을 통하여 국제체제에서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세력과 경계하고자 하는 세력을 알 수 있으므로 두 국가의 동맹 포트폴리오가 일치할 수록 국제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비슷하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군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군, 그리고 북한이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군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과 일본의 동맹 포트폴리오가 서로 더 일치하고 공통적인 동맹국을 포함하므로 한국과 일본이 국제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유사하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변수는 유진 소프트웨어(EUgene Software)¹⁵⁾를 통해 추출하였다.

(2) 무력 갈등의 유무

기존에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국의 관계에 부정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충돌을 경험했을 경우, 영토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력사용을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보다 더 선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을 고려하여 두 국가가 1816년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군사력을 사용한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무력갈등(Military Interstate Disputes; MIDs)이 없었던 경우와 있었던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로짓회귀분석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국가 간에 MIDs 경험에 따라 핵심 독립변수의 작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추적하였다.

¹⁴⁾ Signorino (1999)를 참고.

¹⁵⁾ Bennett (2000)를 참고. Website: <http://eugenesoftware.org>.

(3) 분쟁해결 수단 사용 경험

두 국가가 분쟁해결 수단을 여러 번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경우, 절차에 더 익숙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더욱 선호할 수 있다.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국제체제의 행위자인 국가와 체제 간에는 상호영향력을 주고 받기 때문에, 한번 경험한 분쟁해결 시도 유무로 인하여 이후의 분쟁해결수단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관찰값의 직전 3년 간 각각의 분쟁해결수단을 사용했었던 경험을 측정하였다. 이때 분쟁해결수단의 사용이 일 년 이상 지속되었던 경우는 햇수를 횡수로 세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자협상을 1980년에 시작하여 이것이 지속되면서 1984년에야 협상이 종결되었을 때, 1985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분쟁해결수단 시도경험을 세면 양자협상은 단 한번 시도했던 것으로 기록하였다.

(4) 지리적 근접성

이에 더하여 분쟁당사국 간의 양자적 특성 중, 기존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국제분쟁 관련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지리적 근접성과 식민지 지리적 근접성은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무력을 사용하는 분쟁으로 확대되고, 마침내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꼽혀왔다. 영토분쟁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국가 간에 일어나기 힘든 종류의 분쟁이기는 하나, 무력사용이라는 변수가 전쟁연구와 맺고 있는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를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단, 양자협상과 제3자 개입 중에서 선택하는 세번째 단계, 그리고 외교적 해결수단과 법적 해결수단 중에서 선택하는 네번째 단계에서는 식민지 지리적 근접성을 제외한다. 두 단계의 관찰값이 매우 적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 근접성 변수를 통해 충분히 통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이 모형을 구성한다.

통제변수로만 활용할 것이므로 근접성이 높은 경우, 즉 육상 및 12해리까지

의 거리에 있는 경우를 1의 값을 매기고 그 외의 경우는 0의 값을 매긴다. 식
민지 지리적 근접성 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육상 및 12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경우를 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상정하여 1의 값을 매기고 그 외의 경우는 0
의 값을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분석 모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분쟁당사국이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단계는 양자택일의 선택지에 대한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종속변수는 0과 1이라는 두 개의 값만을 갖는다. 이는 0과 1이라는 두 값을 갖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값을 매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종속변수가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일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사용하는 통계분석 모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이하 로짓 분석)을 채택한다.

또한 위 네 가지 모델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영토분쟁의 전체 국가쌍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중에서 1816년 이래 양국 간에 무력을 사용하는 갈등(MIDs)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국가쌍을 따로 구분하여 다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무력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는 국가쌍에 대하여 분석한다. 두 국가 간에 갈등이 존재했고, 또한 무력을 사용할 만큼 갈등이 격렬했다는 것은 이후의 분쟁에서도 그만큼 쉽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경우의 분쟁해결수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상기 네 단계에 대하여 각각 세 가지 모형을 사용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실증분석에서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값을 사용한다.

1) 영토분쟁의 분쟁해결 시도 여부에 대한 선택

모형 1-a에서는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 간에는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논문의 가설과 선행연구의 주도적인 주장과 엇나가는 분석결과이다. 양국의 무역관계가 영토분쟁에 의해서 위축되지 않거나, 또는 이미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국가 간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쉽게 움직이지 않고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추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통제변수에서는 직전 3년 안에 무력사용, 양자협상, 비구속적 제3자 개입, 그리고 구속적 제3자 개입과 같은 분쟁해결 시도를 했던 경우에 마찬가지로 분쟁해결 시도를 다시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통의 동맹 포트폴리오가 있어 양국이 국제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 경우,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지리적 근접성이 높을 수록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모형1에서 다루는 첫번째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데에는 무력사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쟁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까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떤 수단을 통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모형 1-b는 전체 국가쌍 중에서 1816년 이래 무력갈등(military interstate conflict; MIDs)이 있었던 국가쌍만을 대상으로 한 로짓 분석이다. 모형 1-b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강한 국가 간에는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전체국가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던 모형 1-a와 같은 결과이다.

표 IV.1: 영토분쟁 분쟁해결 시도 여부에 대한 로짓 분석

변수	로짓 모형1-a 전체 국가군	로짓 모형1-b MIDs 경험 유	로짓 모형1-c MIDs 경험 무
핵심변수			
국방비 지출 차이	-.290 (.253)	-.002 (.271)	-5.379** (1.150)
양국 간의 동맹관계	-.142 (.086)	-.061 (.093)	-.136 (.286)
경제적 상호의존	-7.998** (1.315)	-8.240** (1.344)	15.349 (10.065)
민주주의 체제의 친밀도	.017 (.012)	.017 (.013)	-.020 (.043)
통제변수			
공통의 동맹 포트폴리오	.230 [†] (.138)	.247 [†] (.149)	-.593 (.524)
직전 3년 내 무력사용 경험	.348* (.147)	.376** (.143)	2.762* (1.285)
직전 3년 내 양자협상 경험	.630** (.063)	.552** (.061)	1.851** (.212)
직전 3년 내 비구속적 제3자 개입 경험	.711** (.100)	.663** (.096)	2.952** (.647)
직전 3년 내 구속적 제3자 개입 경험	1.283** (.181)	1.227** (.173)	0 (omitted)
지리적 근접성	.537** (.091)	.423** (.099)	.605 [†] (.345)
식민지 지리적 근접성	.431** (0.102)	.389** (.106)	-.353 (.876)
Constant	⁷¹ -1.886** (.259)	-2.027** (.273)	2.519 [†] (1.280)
Number of observations	5440	4531	803
Log pseudolikelihood	-2467.3541	-2174.6915	-224.40802

유의성 수준: [†] < .10, * < .05, ** < .01;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

또한 공통의 동맹 포트폴리오가 분쟁의 해결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 3년 내 무력사용, 양자협상, 그리고 비구속적, 구속적 제3자 개입을 경험한 경우에는 분쟁을 그대로 두기보다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쟁의 해결시도 경험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이 높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반면 모형 1-c에서는 양국 간에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국방비 지출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분쟁을 해결하여 양국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재개하는 데에 큰 동인이 없으며,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형 1-c에서도 무력사용이나 양자협상, 제3자 개입과 같은 분쟁해결수단 사용 경험이 있을 때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이 분쟁해결의 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분쟁해결 시도에 대한 첫번째 단계에서 모형1-a, 모형 1-b, 모형1-c 모두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2) 무력사용과 평화적 해결수단에 대한 선택

모형 2-a를 보면 양국 간에 국력의 차이가 클 경우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세력균형이 깨지고, 비교적 강대국과 약소국이 구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영토분쟁에서 무력사용을 제쳐두고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을 선호한다는 것은 세력우위이론과 일치한다. 반대로 국력의 차이가 작을 경우에는 세력균형이 일어난 상태로, 이때에 오히려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력사용을 선택한다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IV.2: 무력사용과 평화적 해결수단에 대한 로짓 분석

변수	로짓 모형2-a (전체 국가군)	로짓 모형2-b (MIDs 경험 유)	로짓 모형2-c (MIDs 경험 무)
핵심변수			
국방비 지출 차이	1.542** (.530)	1.299* (0.592)	-8.319 (9.906)
양국 간의 동맹관계	-.662** (.224)	-.501* (.226)	0 (omitted)
경제적 상호의존	11.989* (5.097)	11.151* (4.524)	-46.884 (62.517)
민주주의 체제의 친밀도	-.008 (.032)	-.029 (.035)	1.251 (.807)
통제변수			
공통의 동맹 포트폴리오	.258 (.373)	.222 (.386)	69.697 [†] (37.053)
직전 3년 내 무력사용 경험	-1.889** (.205)	-1.768** (.199)	0 (omitted)
직전 3년 내 양자협상 경험	.548** (.135)	.507** (.132)	0 (omitted)
직전 3년 내 비구속적 제3자 개입 경험	.594** (.134)	.579** (.129)	0 (omitted)
직전 3년 내 구속적 제3자 개입 경험	.542 (.208)	.557** (.207)	0 (omitted)
지리적 근접성	-.027 (.216)	.014 (.239)	0 (omitted)
식민지 지리적 근접성	.780* (.320)	.928** (.325)	0 (omitted)
Constant	.73 .115 (.551)	.229 (.228)	-70.812 (33.484)*
Number of observations	1158	1032	13
Log pseudolikelihood	-421.78023	-400.63074	-4.1562476

유의성 수준: † < .10, * < .05, ** < .01;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

또한 동맹관계가 있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또한 동맹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반대되는 분석결과이기도 하다. 동맹관계가 평화를 지향하는 관계이기 보다는 제삼국과의 전쟁 시 자국의 전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존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한 국가 간에는 무력사용보다 평화적 해결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만족하는 분석 결과이다. 즉 전체 무역량에 비교했을 때 양국 간의 무역량이 많은 국가쌍일수록 국가이익 창출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분쟁당사국 간에는 무력사용보다는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통제변수 중에서는 최근 3년 간 무력사용을 경험했던 국가 간에는 무력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양자협상이나 비구속적 제3자 개입과 같은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을 사용했던 국가는 다시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최근의 사용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력갈등을 경험한 국가쌍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2-b는 모형2-a와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먼저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경우에 평화적 분쟁해결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세력우위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세력균형이론이 영토분쟁의 분쟁해결수단 선택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 간의 국력 차이가 작은 세력균형 시에는 오히려 무력 사용을 선택하며, 반대로 국력 차이가 큰 세력불균형 시에는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모형 2-a의 분석결과와 같이, 모형2-b의 분석결과에서도 양국이 동맹관계에 있을 때 평화적 분쟁해결수단보다 무력 사용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맹관계에 있다고 하여 반드시 두 국가가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 역시 모형 2-a와 같이 상호의존 정도가 높을 수록 무력사용보다는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역시 모형 2-a와 마찬가지로 분쟁해결수단의 최근 사용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형 2-a와 모형 2-b는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영토분쟁의 분쟁해결 수단을 무력사용과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 중에서 선택할 때에 국력 차이와 동맹관계,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무력갈등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쌍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관찰값의 수가 부족하여 핵심독립변수에 대하여 크게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3) 분쟁해결 중 제3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선택

모형 3-a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도가 강할 수록 국가는 양자협상을 제3자 개입보다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자협상과 제3자 개입은 모두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이기 때문에 모형1-a나 모형 2-a의 분석결과와 연관선상에서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양자협상은 분쟁당사국의 자유도가 훨씬 높고, 제3자 개입은 외부의 권위로부터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 간에는 협력적인 관계가 자리잡아, 제3자의 개입 없이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의 핵심독립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평화적 분쟁해결을 선택한 분쟁당사국들 중에서 다시 수단의 선택이 분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강력하게 반영되는 국력의 차이나 동맹관계 변수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무력갈등을 경험한 국가쌍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3-b에서는 모형 3-

표 IV.3: 분쟁해결 중 제3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선택 로짓 분석

변수	로짓 모형3-a (전체 국가군)	로짓 모형3-b (MIDs 경험 유)	로짓 모형3-c (MIDs 경험 무)
핵심변수			
국방비 지출 차이	-.300 (.587)	-.939 (.619)	4.973 (5.107)
양국 간의 동맹관계	.259 (.198)	.179 (.210)	1.455 (1.464)
경제적 상호의존	-6.060* (2.865)	-5.073 [†] (2.975)	-12.271 (24.620)
민주주의 체제의 친밀도	-.036 (.029)	-.079* (.033)	.346 (.223)
통제변수			
공통의 동맹 포트폴리오	.332 (.327)	.649 [†] (.356)	-.100 (2.902)
직전 3년 내 무력사용 경험	.392 (.429)	.357 (.412)	0 (omitted)
직전 3년 내 양자협상 경험	-.733** (.122)	-.634** (.122)	-1.876** (.591)
직전 3년 내 비구속적 제3자 개입 경험	1.206** (.205)	1.142** (.203)	3.402** (.829)
직전 3년 내 구속적 제3자 개입 경험	2.760** (.377)	2.589** (.378)	0 (omitted)
Constant	-.832 (.569)	-.263 (.582)	-9.004 (6.275)
Number of observations	990	873	111
Log pseudolikelihood	-447.52563	-403.22895	-29.261754

유의성 수준: [†] < .10, * < .05, ** < .01;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

a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할 수록 양자협상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MIDs 경험이 있다는 것을 양국이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으로 본다면,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은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상쇄시키는 작용을 할 수있다. 즉, 제3자 없이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분쟁해결 수단을 선호할 수 있게 된다. 반면, MIDs 경험이 있으면서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도 낮다면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신뢰도가 떨어지는 상대국 이외에도 제3자가 개입하는 분쟁해결이 더 유리하리라고 판단할 것이다.

더불어 모형 3-b에서는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친밀도가 유의미한 변수라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친밀도가 높을 수록 제3자 개입보다는 양자협상을 선호한다. 이는 분쟁해결 수단의 선택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되는 것이다. 특히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가 주장하듯이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적인 과정과 법치에 기반한 정책결정 과정을 내면화하여 국가 간의 분쟁에서도 민주적이고 적법한 수단을 선호하리라는 가설이 전혀 맞지 않는 분석결과이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모형 3-a와 마찬가지로 양자협상을 경험했던 국가쌍은 다시 양자협상을 선택하며, 구속적 제3자 개입이나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택했던 국가는 이를 다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핵심독립변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지 못한 모형 3-c에서도 유일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제3자 개입의 구속성 여부에 대한 선택

4-a에서는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클 수록, 즉 분쟁당사국 간의 세력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었을 수록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MIDs를 경험한 국가쌍을 대상으로 분석한 4-b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 IV.4: 제3자 개입의 구속성 여부에 대한 로짓 분석

변수	로짓 모형4-a 전체 국가군	로짓 모형4-b MIDs 경험 유	로짓 모형4-c MIDs 경험 무
핵심변수			
국방비 지출 차이	-3.191** (.986)	-4.213** (1.091)	4.704 (4.725)
양국 간의 동맹관계	-.938* (.446)	-1.089* (.488)	-3.455 (4.726)
경제적 상호의존	4.668 (5.094)	6.409 (5.318)	8.592 (30.566)
민주주의 체제의 친밀도	.069 (.066)	.019 (.071)	0 (omitted)
통제변수			
공통의 동맹 포트폴리오	.707 (.663)	1.083 (.706)	5.885 (7.634)
직전 3년 내 무력사용 경험	-.752 (.859)	-.776 (.885)	0 (omitted)
직전 3년 내 양자협상 경험	-.249 [†] (.133)	-.221 [†] (.128)	.279 (2.093)
직전 3년 내 비구속적 제3자 개입 경험	-1.180* (.455)	-1.113* (.465)	-2.594* (1.138)
직전 3년 내 구속적 제3자 개입 경험	3.243** (.597)	3.195** (.642)	0 (omitted)
Constant	.777 (.843)	1.595 [†] (.889)	-7.160 (5.996)
Number of observations	383	350	16
Log pseudolikelihood	-115.20223	-100.4019	-7.9730768

유의성 수준: [†] < .10, * < .05, ** < .01;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분쟁해결 중 양자협상과 제3자 개입 중에서 국방비 지출 차이가 큰 국가쌍은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이유로 들었던 것과 같은 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 즉,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통해서 상대적 강대국은 자국의 강한 국력을 사용하여 보다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제3의 권위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수록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쌍 간에도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모형 4-a와 모형 4-b가 모두 같은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영토분쟁을 평화적 분쟁해결수단, 그 중에서도 제3자 개입을 선택한 국가쌍은 동맹관계가 있을 때 구속적 제3자 개입보다는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로는 양자협상, 그리고 비구속 제3자 개입을 경험했던 국가쌍은 비구속 제3자 개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속적 제3자 개입을 경험했던 국가는 다시 구속적 제3자 개입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통의 동맹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변수나 무력사용 경험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번째 단계가 세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평화적 분쟁해결을 이미 선택한 경우만을 관찰값으로 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 분석 결과 및 함의

국방비 지출의 차이 영토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첫번째 단계에서, 국방비 지출의 차이는 오직 MIDs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쌍만을 대상으로 한 로짓분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클 수록 분쟁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클 수록 두번째 단계에서 무력사용보다는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클 수록 네번째 단계에서 구속적 제3자 개입보다는 비구속적 제3자 개입

을 선호한다. 이 분석결과는 전체 국가쌍을 대상으로 한 로짓분석과 무력갈등을 경험한 국가쌍만을 대상으로 한 로짓분석의 결과가 같다.

이에 대하여 상대적 강대국의 입장이 그 원인이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력우위이론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강대국과 약소국의 국력 차이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관계에서는 영토분쟁을 굳이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해결수단을 선택한다. 반대로 두 국가 간의 국력 차이가 작아 세력균형 상태일 때에는 오히려 전쟁에 대한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패배 가능성이 낮아, 분쟁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그렇기에 무력사용을 불사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강대국은 자국의 강한 국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더 국익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구속적 제3자 개입과 구속적 제3자 개입 중에서는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호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동맹관계 양국 간에 동맹관계가 있을 때 두 번째 단계에서 영토분쟁을 무력사용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무력갈등을 경험했던 국가가 그러하다. 또한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쌍 간에는 네 번째 단계에서 구속적 제3자 개입보다는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호한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불일치하며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불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동맹관계에 있다고 하여 반드시 두 국가가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3국을 공공의 적으로 상정하고 그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가 동맹관계를 맺을 때, 이들의 관계는 공공의 적에 대항할 때에만 협력적일 수 있다. 그 외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협조할 필요가 없다. 영토분쟁은 다른 분쟁보다 유독 국가에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 없는 영토분쟁에 대한 갈등에서는 비평화적이거나 비사법적이라고 해도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동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보다는 무력사용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영토분쟁 해결에 있어서 무력사용을 반드시 선호하게 되는 이유인데, 이에 대해서는 더욱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동맹의 포트폴리오 변수가 동맹관계와 함께 유의미했다면 상관계수의 부호를 기반으로 하여 심층 분석이 가능했을 터이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

경제적 상호의존 경제적 상호의존은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단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경제의존 정도가 높을 수록 분쟁당사국은 영토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두번째 단계로 진입하면 무력사용보다는 평화적 분쟁해결을 더 선호한다. 이때 세번째 단계에서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 중에서 선택할 때에는 제3자 개입보다는 양자협상을 선호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과 일부는 일치하고 일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가 가정하였던,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적이고 법적인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영토분쟁 해결수단 선택의 원칙이 매 단계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원칙을 앞서는 다른 설명변수가 따로 존재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이 강한 국가는 보다 안전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경제적으로 상호의존 정도가 높은 두 국가 간에는 만일 영토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선불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평화적 수단을 선택한다. 또한 제3자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되는 양자협상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친밀도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친밀도는 세번째 단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쟁을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한 이후, 양자협상과 제3자 개입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에는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친밀도가 높을 수록 양자협상을 더 선호한다. 단, 이는 전체 국가쌍에 대한 로짓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오직 MIDs를 과거에 경험한 국가쌍을 대상으로 한 로짓분석에서만 유의미했다.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친밀도가 높을 수록 민주적이고 타협적이며 법치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을 선호하리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불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민주평화론 주장이 옳다면 무력사용과 평화적 수단을 고르는 두번째 단계에서는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더욱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민주평화론이 영토분쟁에서 어떤 한계점을 갖는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1. 논의

영토분쟁의 해결수단을 연구한 기존 학자들은 다양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토분쟁의 해결수단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이나 양자협상, 구속적/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모두 동등한 개념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무력사용과 평화적 해결수단, 또는 무력사용과 양자협상을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쟁해결수단이 서로 직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합리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분쟁해결 수단의 선택을 분석하였다. 분쟁의 해결수단들 간의 관계를 게임트리와 같은 구조로 이해하고, 선택 과정을 추적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핵심 변수로 분쟁당사국 간의 군사력 지출의 차이, 동맹관계,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친밀도를 구체화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이론적 틀을 세웠다. 가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제정치이론과 국제법의 실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각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과 연구 결과를 도입하여 각 가설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또한 실제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분쟁해결수단 선택이 각 가설과 맥락을 같이 했던 사례를 선정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인과관계를 짚어보았다. 그리고 구

체적인 변수를 조작정의하고 지표를 선정하며, 로짓 분석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그 통계적 유의도를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대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선택 문제가 국제정치학의 주요 연구영역인 세력균형 및 세력우위, 경제적 상호의존론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영토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양자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데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영토분쟁 해결시도 여부에 대한 선택 양국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클수록 영토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며, 반대로 상호의존 정도가 작을수록 영토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MIDs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클 때에는 분쟁 해결시도를 하지 않고, 차이가 작을 때에는 분쟁해결시도를 한다.

분쟁해결 수단의 평화적 여부에 대한 선택 양국 간에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동맹관계가 없는 경우,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클수록 평화적 해결수단을 통하여 영토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반대로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을수록, 또한 동맹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작을수록 무력사용을 통하여 영토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MIDs 경험이 전혀 없는 국가쌍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분석결과이므로 MIDs 경험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 중 제3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선택 영토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한 국가쌍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클 때 분쟁을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즉, 양자협상보다는 제3자 개입을 기피한다. 또한 MIDs 경험이 있는 국가에 한하여 민주주의 정체체제의 친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보다는 양자협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개입의 구속성 여부에 대한 선택 제3자 개입을 통하여 영토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한 국가쌍 간에 서로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크고 동맹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호한다. 반대로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고, 동맹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가장 설득력있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세력우위이론의 국력 차이로 인한 세력균형 시 더 갈등적이며, 반대로 세력불균형 시 오히려 갈등이 억지되어 현상유지적이고 평화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진다는 세력우위이론의 설명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더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호할 것이라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이다. 동맹이론은 기존의 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동맹의 조건적인 효과를 따로 추적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민주평화론 역시 영토분쟁의 해결에 대하여서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가능성

본 연구는 영토분쟁의 해결수단이 선택되는 데에 있어서 분쟁당사국의 양자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리라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력의 차이와 경제적 상호의존이 주요한 설명변수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나, 더욱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각 변수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및 상관관계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뒤따라야 더욱 설득력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 연구를 통해 동맹이론과 영토분쟁의 분쟁해

결수단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비단 동맹에 대한 두 가지 측면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변수들이 상황에 따라 다른 방향성을 갖는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여실히 읽어낼 수 있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변이의 패턴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는 패턴을 잡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다 세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이를 반영하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영토분쟁의 연구에 있어서 영토분쟁 데이터는 연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영토분쟁 데이터는 아직 2001년까지의 것으로 그쳐, 2014년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는 영토분쟁을 추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신흥국가들은 국력이 상승하면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때문에 영토분쟁의 해결에 대한 연구가 최신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 현실 국제정치에도 더욱 유의미한 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ICOW 프로젝트에서 2010년까지의 데이터 갱신 작업이 진행중이다. 공지된 바에 따르면 2014년 여름까지 중동 및 동유럽의 영토분쟁 데이터를, 그리고 2014년 하반기까지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데이터 갱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최근 데이터를 포함하여 연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게다가 본 연구는 분쟁당사국의 양자적 특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각각의 해결시도를 주도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파악할 수 있다면 분쟁해결 수단을 누가 언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연구와 데이터셋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하다. 분쟁의 해결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하는 국가의 개별적 특성까지 쫓을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다면 영토분쟁에서 국가의 선택에 따라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평화적인 해결로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 Akande, Dapo. "International Law Immunitie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8, No. 3, pp. 407–433, 2004.
- Allee, Todd L. and Huth, Paul K. "Legitimizing Dispute Settlement: International Legal Rulings as Domestic Political Cov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No. 2, pp. 219–234, 2006.
- Amann, Diane Marie and Sellers, M.N.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81-404 pp., 2002.
- Barbieri, Katherine and Reuveny, Rafael. "Economic Globalization and Civil War." *Journal of Politics*, Vol. 67, No. 4, pp. 1228–1247, 2005.
- Bennett, D. Scott and Stam, Allan. "EUGene: A Conceptual Manu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6, pp. 179–204, 2000.
- Bown, Chad. "On the Economic Success of GATT/WTO Dispute Settle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6, No. 3, pp. 811–823, 2004.
- Brown, Bartram. "Unilateralism, Multilateralism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Steward Patrick and Shepard Forman (eds.), *Multilateralism and the U.S. Foreign Policy: Ambivalent Engagement*, 323-344 pp. Lynne Rienner Publishers, 2002.
- Bueno de Mesquita, Bruce. "An Expected Utility Theory of International conflict." *The American Political Review*, Vol. 74, No. 4, pp. 917–931, 1980.
- . "Risk, Power Distributions, and the Likelihood of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5, No. 4, pp. 541–568, 1981.

- Bueno de Mesquita, Bruce, Morrow, James D., and Zorick, Ethan R. "Capability, Perception, and Escal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1, pp. 15–27, 1997.
- Bueno de Mesquita, Bruce and Siverson, Randolph M. "War and the Survival of Political Leaders: A Comparative Study of Regime Types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9, No. 4, pp. 841–855, 1995.
- Cela, Alba and Lleshaj, Sashenka. "Albanian Greek Relations from the Eyes of the Albanian Public - Perceptions 2013." 2014.
- Chapman, Terrence L. "International Security Institutions, Domestic Politics, and Institutional Legitimac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1, pp. 134–166, 2007.
- D'Amato, Anthony. "Trash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1, No. 1, pp. 101–105, 1987.
- Davis, Christina L. and Meunier, Sophie. "Business as Usual? Economic Responses to Political Tens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5, No. 3, pp. 628–646, 2011.
- de Mesquita, Bueno, Bruce, Morrow, James D., Siverson, Randolph M., and Smith, Alastair.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of the Democratic Peac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4, pp. 791–809, 1999.
- Dixon, William J. "Democracy and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1, pp. 14–32, 1994.
- . "Third-Party Techniques for Preventing Conflict Escalation and Promoting Peaceful Settl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 No. 4, pp. 653–681, 1996.
- . "Dyads, Disputes, and the democratic Peace." in Murray Wolfson (ed.),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and Peace*, 103–126 pp. Springer US, 1998.
- Dixon, William J. and Senese, Paul D. "Democracy, Disputes, and Negotiated Settlement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4, pp. 547–571, 2002.

- Elsa, Jennifer K. "U.S. Policy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Gerald M. Kessler (ed.), *Law and Law Enforcement*. Nova Science Publishers, 1998.
- Fearson, James D.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3, pp. 577–592, 1994.
- Finnemore, Martha. *The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Gartzke, Erik and Li, Quan. "War, Peace, and the Invisible Hand: Positive Political Externalities of Econom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7, No. 4, pp. 561–586, 2003.
- Gartzke, Erik, Quan Li and Boehmer, Charles. "Investing in the Peac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2, pp. 391–438, 2001.
- Gelpi, Christopher F. and Criesdorf, Michael. "Winners or Losers? Democracies in International Crisis, 1918-199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3, pp. 633–647, 2001.
- Gibler, Douglas M. "Control the Issue, control the conflict: the Effect of Alliances that Settle Territorial Issues on Interstate Rivalri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2, No. 4, pp. 341–368, 1997.
- . *International military alliances, 1648-2008*. CQ Press, 2009.
- Gilpin, Robert. "The Richness of Realist Tradition." in Robert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 Gilpin, Robert and Gilpin, Jean M.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8.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Goldsmith, Jack. "The Self-defeating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70, No. 1, pp. 89–104, 2003.
- Hargrove, John Lawrence. "The Nicaragua Judgment and the Future of the Law of Force and Self-Defens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 No. 135-143, 81.
- Hensel, Paul R. "Contentious Issues and World Politics: The Management of Territorial Claims in the Americas, 1816-1992."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1, pp. 81–109, 2001.

- . “Territory: Geography, contentious Issues, and World Politics.” in John A. Vasquez (ed.), *What Do We Know About War*, 3-26 pp.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2 edition, 2012.
- Hensel, Paul R., Mitchell, Sara McLaughlin, II, Thomas E. Sowers, and Thyne, Clayton L. “Bones of Contention: Comparing Territorial, Maritime, and River Issu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1, pp. 117–143, 2008.
- Horn, Henrik, Petros C. Mavroidis and akan Nordstr om, H. *Is the Us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iased?* 2340.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London, 1999.
- Huth, Paul, Christopher Gelpi and Bennett, D. Scott. “The Escalation of Great Power Militarized Disputes: Testing Rational Deterrence Theory and Structural Rea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3, pp. 609–623, 1993.
- Huth, Paul K. *Standing Your Ground*.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 Huth, Paul K. and Allee, Todd L. “Domestic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the Escalation and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6, pp. 754–790, 2002.
- Kacowicz, Arie. *Peaceful Territorial Chang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4.
- . “The Problem of Peaceful Territorial Chang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8, No. 2, pp. 219–254, 1994.
- Keohane, Robert O. and Nye, Joseph S.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in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Little, Brown, 1977.
- .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in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Little, Brown, 1989.
- Kirgis, Frederic L. “Custom on a Sliding Scal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1, No. 1, pp. 146–151, 1987.
- Lee, Hoon and Mitchell, Sarah McLaughl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erritorial Disp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6, No. 4, pp. 675–703, 2012.

- Leeds, Brett Ashley and Anac, Sezi. "Alliance Institutionalization and Alliance Institutionalization and Alliance Performance." *International Internations*, Vol. 31, pp. 183–202, 2005.
- Mandel, Robert. "Roots of the Modern Interstate Border Disput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3, pp. 427–454, 1980.
- Mansfield, Edward D. and Pollins, Brian M. "The Study of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Recent Advances, Open Ques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5, No. 6, pp. 834–859, 2001.
- Maoz, Zeev and Russett, Bruce. "Normative and structural causes of democratic peace, 1946-19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3, pp. 624–628, 1993.
- Mitchell, Sarah McLaughlin and Prins, Brandon C. "Beyond Territorial Contiguity: Issues at Stake in Democratic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3, No. 1, pp. 169–183, 1999.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Knopf, 1954.
- Morrison, Fred L. "Legal Issues in the Nicaragua Opin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1, No. 1, pp. 160–166, 1987.
- Morrow, James D. "Alliances, Credibility, and Peacetime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8, No. 2, pp. 270–297, 1994.
- Nolte, Georg.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David M. Malone and Yuen Foong Khong (eds.), *Unilateralism and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Perspectives*, 71-94 pp. Lynne Rienner Publishers, 2003.
- Oneal, John R., Oneal, Frances H., Maoz, Zeev, and Russett, Bruce. "The Liberal Peace: Interdependence, Democracy, and International conflict, 1950-1985."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3, No. 1, pp. 11–28, 1996.
- Oneal, John R. and Russett, Bruce. "The Classical Liberals Were Right: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1950-198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2, pp. 267–293, 1997.
- Organski, A.F.K. *World Politics*. Knopf, 2 edition, 1968.

- Organski, A.F.K. and Kugler, Jacek. *The War Led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Owen, John M. "How Liberalism produces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2, pp. 87–125, 1994.
- Polachek, Solomon William. "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1, pp. 55–78, 1980.
- Raymond, Gregory A. "Democracies, Disputes, and Third-Party Intermedia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8, No. 1, pp. 24–42, 1994.
- Reichler, Paul S. "Holding America to ITs Own Best Standards: Abe Chayes and Nicaragua in the World Court."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2, pp. 15–46, 2001.
- Reinhardt, Eric. *Aggressive Multilateralism: The Determinants of GATT/WTO Disputes Initiation, 1948-1998*. Emory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2000.
- Reus-Smit, Christian. *The Moral Purpose of th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 Rosenne, Shabtai.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 Essay in Political and Legal Theory*. A. W. Sijthoff., 1957.
- Rosenne, Shabtai, Gill, Terry D., Molenaar, Erik Jaap, and Elferink, Alex G. Oude. *The World Court: What it is and how it Works*. United Nations Publications, 2003.
- Schultz, Kenneth A. "Domestic Opposition and Signaling in International Cri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4, pp. 829–844, 1998.
- . *Democracy and Coercive Diplom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Signorino, Curtis S. and Ritter, Jeffrey M. "Tau-b or Not Tau-b: Measuring the Similarity of Foreign Policy Posi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 No. 1, pp. 115–144, 1999.
- Simmons, Beth A.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Annual Reviews of Political Science*, Vol. 1, No. 1, pp. 77–93, 1998.

- . “Capacity, Commitment, and Complianc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erritorial Disp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6, pp. 829–856, 2002.
- . “Rules over Real Estate: Trade, Territorial Conflict, and International Borders as Institu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No. 6, pp. 823–848, 2005.
- Singer, J. David and Small, Melvin. “Formal Alliances, 1815-1939.”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 No. 1, pp. 1–31, 1966.
- Singer, J. David, Stuart Bremer and Stuckey, John.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Bruce Russett (ed.), *Peace, War, and Numbers*. Sage, 1972.
- Skidmore, David. “Understanding the Unilateralist Turn in U.S.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 No. 2, pp. 207–228, 2005.
- Smith, Alastair. “Alliance Formation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9, No. 4, pp. 461–425, 1995.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pp. 461–495, 1984.
- Thompson, Alexander. “Coercion Through IOs: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Logic of Information Transmis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0, No. 1, pp. 1–34, 2006.
- Vasquez, John A. “The Steps to War: Toward a Scientific Explanation of Correlates of War Findings.” *World Politics*, Vol. 40, No. 1, pp. 108–145, 1987.
- Vreeland, James Raymond. “Why Do Governments and the IMF Enter into Agreements? Statistically Selected Cas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4, No. 3, pp. 321–343, 2003.
- Walter, Barbara F. “The Critical Barrier to Civil War Settl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1, No. 3, pp. 335–364, 1997.
- . *Committing to peace: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Civil Wa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 Waltz, Kenneth.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1, pp. 5–41, 2000.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bley, 1979.

Weller, Marc. “Undoing the Global Constitution: UN Security Council Action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Affairs*, Vol. 4, No. 693-712, 78.

Werner, Suzanne. “Choosing Demands Strategicall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6, pp. 705–726, 1999.

Yasuaki, Onuma. “I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 Emperor without Clothes?” *International Legal Theory*, Vol. 8, No. 1, 2002.

배진수, 윤지훈,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동북아역사재단, 2008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12

웹 사이트 및 온라인 자료 (최종검색일: 2013년 7월 4일)

Center for Systemic Peace, (URL: <http://www.systemicpeace.org/inscrdata.html>)

CIA Factbook- Albania. (URL: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l.html>)

CIA Factbook- Croatia, (URL: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hr.html>)

CIA Factbook- Slovenia, (URL: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i.html>)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06. “Status of US Bilateral Immunity Agreements.” (URL: <http://www.state.gov/s/l/treaty/c3428.htm>)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udgment go 20 December 1974. *The Nuclear Test Case* (URL: <http://www.icj-cij.org/docket/index.php?p1=3&p2=3&k=6b&case=59&code=nzf&p3=4>)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udgment of 24 May 1980.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URL: <http://www.icj-cij.org/docket/index.php?p1=3&p2=3&case=64&code=usir&p3=4>)

- Lee, Hoon, “Economic Globalization and Territorial disputes.” (URL: <http://www.guleninstitute.org/publications/analyses/>)
- Republic of Croat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uropean Integrating. 2009. “The Chronology of the Border Dispute Between Croatia and Slovenia.”. (URL: <http://www.esiweb.org/>)
- Hellenic Communication Service. 2009. “Greece, Albania Sign Continental Shelf Pact.”. (URL: <http://www.helleniccomserve.com/greecealbania/sign.html>)
- United Nations. 2013.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Vital To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Delegates Affirm, As Sixth Committee Continues Rule Of Law Debate”, GA/L/3457. (URL: <http://www.un.org/News/Press/docs/2013/gal3457.doc.htm>)

Abstract

The Effect of Dyadic factor between States on the Territorial Dispute Settlement Decision

Choi, Hansol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erritorial disputes, how do dyadic relations between parties affect the decision of dispute settlement? Existing research assumes that the power parity or economic interdependency can result in the decision. However, these academic literatures have failed to consider all the dispute settlement options equally, and this has the potential of creating a selection bias in their research design. Thus, under a presumption that states make dispute settlement decisions under rational choice theory, I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among dispute settlements in the form of a game tree, and this game tree can be analyzed using the dyadic factors of the dispute party states.

This research design is consist of power preponderance theory, alliance theory,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democratic peac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y. Difference of military expenditure, existence of alliance, interdependence of trade, and similarity of democratic regime between the two dispute party states are set as the main indecent variable, while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decision of dispute settlement. The research design divides the decision process of territorial dispute into 4 stages: decision on whether to attempt

any settlement, decision on whether to use military power or peaceful settlement, decision on whether to choose bilateral negotiation or involving a 3rd party, and decision on whether to choose binding 3rd party activity or non-binding 3rd party activity. Through this research, I have shown the validity of the hypothesis and testify the major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y indirectly.

As a resul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n whether to attempt any settlement on dispute settlement, high economic interdependence is followed by no attempt and status quo. Low interdependence, on the other hand, leads dispute party states to make them to attempt any kind of dispute settlement, including military use or peaceful settlement. In addition, if the states did not experience any military interstate disputes(MIDs) with each other, they prefer not to attempt any settlement under disparity of their national power.

Also the decision on whether to use military power or peaceful settlement is affected by national power gap, alliance status,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Specifically, states prefer military use when they are power-balanced, under alliance, and have marginal interdependence in economy.

In decision making between bilateral negotiation and 3rd party activity to use in territorial disput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similarity of democratic regime are influential. If the party states are interdependent with each other at a large scale, they tend to prefer bilateral negotiation. Also when those states did not experience any MIDs in the past, they are more democratically similar, and are more likely to choose bilateral negotiation.

Lastly, in 3rd party activities settlement, states also can choose whether the 3rd party's involvement should be binding or non-binding. National power parity and alliances are the key factors of this stage. When the states have parity in their national capability but no alliance, they are more likely to choose binding 3rd party activity to resolve their territorial disputes.

It can be concluded that power preponderance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are the main factors in decision making of dispute settlements in territorial disputes. With this decision making issue, one can notice it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y. Also, this research allows governments to consider which dispute settlement is more likely to be happened in their given dyadic environment in their strategic overview.

Keywords: Territorial Dispute, Dispute Settlement, Difference of Military Expenditure, Alliance, Economic Interdependence, Democratic Peace

Student Number: 2011-23190